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목 차

I. 개 황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2
4. 감사반의 편성	3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4

II. 주요 감사실시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	7
2. 농촌진흥청	28
3. 산 립 청	33
4. 한국마사회	39
5. 한국농어촌공사	41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4
7. 축산물품질평가원	46
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7
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48
1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49
11. 국제식물검역인증원	50
12.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51
13. 한식진흥원	52
14.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53
15. 축산환경관리원	54
16. 한국농업기술진흥원	55

17. 한국임업진흥원	56
1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57
19.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58
20.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59
21. 한국치산기술협회	60
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61
23. 산림조합중앙회	67
24. 해양수산부	68
25. 해양경찰청	80
26. 부산항만공사	84
27. 인천항만공사	86
28. 여수광양항만공사	87
29. 울산항만공사	88
30. 해양환경공단	89
3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90
32. 한국수산자원공단	91
3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92
3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3
35. 한국해양진흥공사	94
3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95
37. 한국어촌어항공단	96
38. 국립해양생물자원관	97
39. 국립해양박물관	98
40. 국립울진해양과학관	99
41. 한국항로표지기술원	100
42. 한국해양조사협회	101
4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102
44. 한국선급	107

Ⅲ.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농림축산식품부	108
2. 농촌진흥청	128
3. 산 림 청	133
4. 한국마사회	139
5. 한국농어촌공사	141
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44
7. 축산물품질평가원	146
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47
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48
1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49
11.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50
12.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151
13. 한식진흥원	152
14.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53
15. 축산환경관리원	154
16.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55
17. 한국임업진흥원	156
1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57
19.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158
20.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159
21. 한국치산기술협회	160
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161
23. 산림조합중앙회	167
24. 해양수산부	168
25. 해양경찰청	183
26. 부산항만공사	187
27. 인천항만공사	189

28. 여수광양항만공사	190
29. 울산항만공사	191
30. 해양환경공단	192
3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93
32. 한국수산자원공단	194
3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95
3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96
35. 한국해양진흥공사	197
3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98
37. 한국어촌어항공단	199
38.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0
39. 국립해양박물관	201
40. 국립울진해양과학관	202
41. 한국항로표지기술원	203
42. 한국해양조사협회	204
4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205
44. 한국선급	211

IV. 일반증인 및 참고인

1. 기관별 증인	212
2. 기관별 참고인	215
3. 증인 · 참고인 주요 신문요지	218

I. 개 황

1. 감사의 목적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정책심의·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회에 부여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기간

- 2025. 10. 14.(화) ~ 10. 30.(목)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감국조법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	[국감국조법 제7조제3호에 직접 명시된 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2개 기관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국감국조법 제7조제4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마사회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축산물품질평가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한식진흥원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축산환경관리원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한국임업진흥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한국치산기술협회 ○ 부산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 울산항만공사 ○ 해양환경공단 ○ 해양수산물과학기술진흥원 ○ 한국수산자원공단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한국해양진흥공사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한국어촌어항공단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국립해양박물관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35개 기관	

4. 감사반의 편성

감사위원	◇ 위원장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위 원 (더 불 어 민 주 당) 윤준병,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이병진,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국 민 의 힘) 김선교, 강명구, 서천호, 이만희,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진 보 당) 전종덕	
사무보조자	◇ 위원회 직원(20인) -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김성완 - 전문위원 황충연 - 행정실장 김건식 - 해양수산조사관 박주연 - 농림정책조사관 김미숙 - 농림정책조사관 김민지 - 농림정책조사관 최재혁 - 농림정책조사관 김소연 - 해양수산조사관 김용선 - 해양수산조사관 김준기 - 농림정책조사관 정민규 - 농림정책조사관 임주형 - 농림정책조사관 신지형 - 농림정책조사관 이길형 - 행 정 관 허성환 - 주 무 관 박경덕 - " 조향순 - " 이현진 - " 황서영	◇ 위원보좌진(19인) ◇ 정책연구위원(4인) - 이호경(더불어민주당) - 박지훈(더불어민주당) - 이선영(국민의힘) - 박현수(국민의힘) ◇ 속기주무관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 장소	비 고
10.14(화)	10:00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축산환경관리원	국 회	【소속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10.15(수)	10:0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물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 회	【소속기관】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동해·서해·남해어업관리단, 지방해양수산청(부산·인천· 여수·마산·울산·동해·군산· 목포·포항·평택·대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
10.16(목)	국정감사 자료정리			
10.17(금)	10:00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촌 진흥청	【소속기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 장소	비 고
10.20(월)	10:00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중앙회	국 회	【소속기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10.21(화)	국정감사 자료정리			
10.22(수)	10:00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	해양 경찰청	【소속기관】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10.23(목)	국정감사 자료정리			
10.24(금)	10:0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포함) 한국마사회	국 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 장소	비 고
10.27(월)	10:0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은행 포함)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선급	국 회	
10.28(화)	10:00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국 회	
10.29(수)	국정감사 자료정리			
10.30(목)	10:00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국 회	

Ⅱ. 주요 감사실시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기획 일반	○ 정책 홍보 영상 제작 시 문화적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 ○ 농식품부 공무원과 공무원 간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 공무원 처우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농식품부 직원 비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 조직관리 필요 ○ 물리적 재난에 대비해 농식품부는 물론 산하기관 전반에 대해 서버 이중화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여부 점검 등 정보 보호 강화 필요 ○ 예비비 집행 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 ○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 모색,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직자 갑질 예방 대책 마련 필요
국제	○ FTA 수입 물량의 구조적 통제 한계 극복 및 국내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 ○ CPTPP 추진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및 농업계 소통·협의 체계 구축을 통한 농정 신뢰 제고 필요 ○ 한미 통상 현안 대응 시 대두·쌀 등 핵심 농산물의 추가 개방 배제에 대한 농식품부의 공식 입장 명확화 등 정책적 신뢰 확보 필요 ○ LMO 감자 수입에 따른 식품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한 면밀한 검토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시중 유통된 LMO 목화씨의 실효적 안전관리 대책 강구 필요 ○ 우리국민 대상 범죄 수사 협조가 미흡한 캄보디아에 대한 농업 ODA 지원 체계 재검토 등 실효적 상응 조치 검토 필요 ○ 비상시 식량안보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진출국을 다변화 하고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구축 필요 ○ 해외 개발 농업자원의 국내 도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공항만 외래병해충 분포조사의 체계적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정규 전담 인력 확보 필요
농촌	○ 농어촌빈집은행 활성화, 농어촌 빈집관리 시스템 체계화 및 빈집 정비 예산 확대 등 대책 마련 필요 ○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제도화 과정에 최초 제안자의 혁신 리스크를 보전하기 위한 전용 지원 기금 또는 제도적 보호 장치 검토 필요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미수립 문제 지적 및 시정 요구 필요 ○ 여성농업인 출산·육아 수당 등 제도 사각지대 현실화를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관련 부처의견 재검토 필요 ○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요건 재검토 필요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 및 국비 보조율 상향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배제 관련 문제 해결 필요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균형성장 및 농촌소멸 대응차원에서 적극 추진 및 확대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적정성 검토 미흡 문제 및 사업추진 재검토 필요 ○ 농산업의 전후방산업에 대한 농식품부의 전략적 육성 대책 마련 필요 ○ 농어촌 통신,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금융 관련 농어민 소외 문제 해소 필요 ○ 농어촌민박 관련 대형 숙박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관련 예산 반영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 강화 필요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저조한 사유 파악 및 대책 마련 필요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상한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한 이동검진버스 운영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독려 필요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 필요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 통과에 대한 정부의 협력 필요 ○ 농촌지역의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농정	○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농지 쪼개기, 비영농인의 농업인 위장 등록, 소농직불제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대응한 관련 실태 조사 및 실제 경작 및 생산활동 여부에 기초한 농업경영체 관리 등 대책 마련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을 식별하는 기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검토 필요 ○ 농업인의 대부분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농식품부에 전담 조직과 인력을 충원하고 농작업 사망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하는 등 농작업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 ○ 농업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농업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 ○ 공동영농모델의 확산을 위해 사업 규모와 예산을 확대하고 초기 참여 요건 완화를 검토하며, 지역 농업을 이끌 수 있는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방안 마련도 필요 ○ 농지은행 임대농지는 청년농을 최우선으로 공급 중이나 공동영농법인의 농지 집적화를 위해 해당 사업 지구 내 농지는 법인에게 우선 지원되도록 개선 필요 ○ 농업대체복무제도 운영에 있어 농지·어장 보유 중심의 선발 기준을 개선하고, 청년 대상 별도 트랙 신설, 잠재력·영농계획·비전 등을 중시하는 선발 방식으로 제도 개편 필요 ○ 농촌 지역 유학생 불법 취업 알선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등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공급체계 정비 필요 ○ 농업진흥지역 내 방치된 유아시설, 노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 농촌 공동생활 편의시설의 이용 대상을 농업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 전체로 확대 필요 ○ 현장 수요가 많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한편,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작업 교육 등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지역별 운영방식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 ○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추가 발생으로 인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의 손실을 만회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농협이 소유한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자 공동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필요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보조금의 사용비율을 센터운영비와 인력운영비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보다 현장 여건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농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 화훼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차액지원, 차등 인상 등 필요 ○ FTA 피해보전직불 제도운영 10년 연장 및 지급요건 완화 및 단가 인상 필요 ○ 식량안보를 위해 농지 보전 계획, 중장기 농지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 농지 관리 및 농지 교환·합병을 통한 농지 규모화를 위해 농지관리기구 도입 검토 필요 ○ 농지 보전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나, 과도한 규제에 의한 재산권 침해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인구감소 대응과 경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지이용률 제고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외국인의 농지 이용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적별로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농지관리기금 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사업 지속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농업재해보험이 농협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재해보험을 장기적으로 축소·개편하고, 위탁기관 수익의 일정 비율을 농업재해대책기금으로 환원해 재해 복구와 영세농 보상에 재투자하는 방안 고민 필요 ○ 감귤·만감류 재해보험 보상기준 개선 필요 ○ 쪽파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확대하고 쪽파 병충해를 농업재해로 인정 필요 ○ 특용작물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가을장마 관련, 수발아·병해 피해벼 전량 수매, 재해보험 가입 기간 추가 연장, 벼·논콩·배추 등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 신속 지원, 사과 열과·낙과 피해에 대한 보험 보장 확대, 저품위 사과 수매 지원, 농협 계약재배를 통한 수급 안정 등 대책 마련 필요 ○ 벼 깨씨무늬병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깨씨무늬병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과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기준이 되는 수확량 산정 시 농업재해로 인정된 피해 연도는 수확량 산정에서 제외하고 수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확량뿐 아니라 품질 저하로 인한 가격 하락 피해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뽕은감 등 과수작물에서 낙과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농민의 입장을 확인하고, 피해 인정과 관련한 현장 보존 및 피해 산정 기준과 개인별 보험료를 적용에 대해 검토 필요 ○ 임목 관련 보험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임산물 중 보험 미적용 품목에 대한 현황 조사 필요 ○ 가축재해보험 대상으로 저병원성AI 보장 상품 개발 필요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을 모든 화훼 품목으로 확대 필요 ○ 농업수입안정보험 추진으로 농가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농가 부담 최소화 방안 모색 필요 ○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전망이 되도록 농작물재해보험, 가격안정제 등과 정책 간 연동 필요 ○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재해복구 지원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부담이 농가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부담 비율 폐지 등 제도 개선방안 검토 필요 ○ 농진청이 운영 중인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의 가입률이 저조하므로 서비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진청과 협력하여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가재난안전시스템(NDMS)의 피해 입력 항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준항목 개선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업 분야 정책보험, 투자, 정책자금 검사 등 전문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 방안 모 색 필요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정책자금 검사 시 단기자금 등 검사 사각지대 해소 및 검사인력 확충 필요 ○ 온실 설치를 목적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농민이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등 필요 ○ 서울중앙농협 조합장 골드바 사건과 관련하여 사업 목적 외 예산 편성·지출은 불법이므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 자에 대한 문책 필요 ○ 산청군농협 조합장의 겸업금지 위반 등 사례가 재발하지 않 도록 지역조합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도시조합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지역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규제 완화 검토 필요 ○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에 따른 농가소득 파악 시 공익 직불금을 농업소득에 포함할 필요 ○ 후계농·귀농자금을 이용하는 2018년·2019년 청년농 대상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차보전률 인상 등 필요 ○ 청년농 사업의 질적 전환을 위해 지난 정책 성과와 문제점 에 대한 평가 실시 및 청년농 지원을 위한 원스탑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필요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기준 완화, 지원금 단 가 인상 및 지원기간 연장 등 검토 및 청년 농촌보급자리사 업 수행 시 입주 조건 완화, 임대기간 연장, 생활권 접근성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등을 고려한 부지 선정 기준 개선 검토 필요 ○ 농업법인 투기 근절을 위하여 부처 간 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책 마련 필요 ○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검토 시 농업인 노후소득을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 ○ 종자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협의 필요 ○ 농어촌공사 임대수탁 농지의 임차인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 실태를 점검하고, 원상복구 비용 등 소유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 감귤 재배 이후 선과·포장 과정에서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출하 지연과 관련하여 감귤 출하 성수기에 인력부족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재배 이후 단계에서도 「근로기준법」 제63조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와 협의 필요 ○ 부모 소유 농지에서 청년창업농이 영농할 경우, 정착지원금과 용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친환경인증제도 관련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익직불 점검 및 단속을 유예하는 등 실경작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해 농업 특수성을 고려한 농산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 필요 ○ 액비 운송 및 살포차량에 농업용 면세유 적용 검토 필요 ○ 신생 품목조합의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과 품목조합 설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립 기준 현실화 검토 필요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관리기금 기금관리비를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 별도 훈령 마련 필요 ○ 농지은행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중심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사업을 국회 보고 및 동의 없이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농 지원이라는 당초 사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농식품혁신	○ 미래 농업 AI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선제적 세부계획 수립 및 분야별 실행 전략 고도화 등 면밀한 사전대책 마련 필요 ○ AX 플랫폼 사업의 농업 현장 확산을 위한 선도 모델 구체화 및 수혜 범위 다각화 등 사업 구조의 실효성 제고 필요 ○ 농업·농촌 미래전략 및 스마트농업 확산에 따른 양극화 방지와 중소·청년농 대상 포용적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청년 농업 유입 촉진 및 농업 AX 선도를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과정의 다각화 필요 ○ 첨단 농기계 보급 가속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및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 도입 검토 필요 ○ 무기질 비료 지원 사업 관련 예산 반영 필요 ○ 상토 가격 안정화 및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메틸브로마이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약관리법상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제주 흑우의 품질 고도화 및 연구 성과 현장 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예산 증액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국정과제 이행 가속화를 위한 AI·첨단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 및 지역균형발전 R&D 예산 증액 필요 ○ 친환경 인증농가의 비의도적인 농약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를 구제하기 위하여 과정 중심 인증제 전환 필요 ○ 친환경인증을 부여받는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임차농 경영 안정화 및 조세 지원 실효성 제고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친환경 농가 임차농 실태의 정밀 진단 및 농지은행 우선순위 부여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농약성분 검사 추가에 따른 친환경 농가 피해 구제 방안 마련 필요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내 직급별 인력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승진 정체 현상 해소 필요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직 직급별 정년 격차 개선을 통한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필요 ○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의 시공업체 선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대출 시행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 지자체 농기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가격 왜곡 방지를 위한 실효적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비료관리법 개정을 통한 가축분뇨 액비 최대살포량 기준 마련 필요 ○ 농기계 안전사고 대책으로 농기계 보조장치 보급률 제고 및 안전교육 확대 필요 ○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무상 보증기간 연장 및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사후관리 서비스 실효성 제고 필요 ○ 국내 말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제 대회 유치 활성화를 위한 「수입위생조건」 체결국 다변화와 국제대회 참가·복귀 말 검역 기간 단축 등 실효적 제도 개선 필요
식품산업	○ 푸드테크산업의 파편적인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푸드테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 필요 ○ 공공배달앱 지원대책과 배달플랫폼 공정화 정책에 대한 농식품부 계획 마련 필요 ○ 할인쿠폰 지급 외에 공공배달앱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개선책 마련 필요 ○ 식자재 유통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부의 정책 방향 및 계획 마련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통식품·민감품목 식품공전 개정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식품 육성 주무부처로서 대응 필요 ○ 화훼 수출 시 혼증 처리비 지원 등 수출 농가 지원 확대 필요 ○ K-푸드 수출시장 다변화, 신선식품 및 농기계 수출 확대 필요 ○ K-푸드 수출실적에 집중하여 농산물 무역적자 및 수입 개방으로 인한 피해 농어민 보호는 외면하는 문제 개선 필요 ○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전국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역할을 확대하고, 정원 증원 등 인력·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며, 입주기업의 근로여건 개선 필요 ○ 원산지 인증제도 폐지에 대한 철회 검토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방역	○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등 가축방역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처우개선 대책 마련 필요 ○ 방역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현장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기관장 상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련 남북협력 방안 검토 필요 ○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살처분 및 재해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살처분 동원 인력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과 치료비 보상 체계 강화 필요
동물복지 환경	○ 유기동물 구조·보호 예산 확대 및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대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체계 혁신방안 마련 필요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반려동물 안전용품 품질인증 및 관리 부실 문제 해결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사업 관련 농민 간 이견, 농촌 난개발, 농작물 생산량 감소,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진 방안 마련 필요 ○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관련 전남, 전북 등 일부 지역이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 및 기존 전력계통 연계 신청자 과밀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개 식용 종식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필요 ○ 신종페츨 문제, 유기동물 보호·관리 정책의 실효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려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향상 방안 마련 필요 ○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규제 완화 재고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시행에 따른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필요 ○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필요
식량	○ 산지쌀값과 소비자쌀값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쌀 유통구조 마련 필요 ○ 식량자급 목표의 재정립과 식량안보의 정의 정립, 지표 마련 및 체계 확립 필요 ○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사업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 필요 ○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명확한 입장 및 계획 수립 필요 ○ 최근 발생한 쌀값 급등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쌀 수급관리 및 유통대책 강구 필요 ○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수확기 쌀 시장격리량 설정 필요 ○ 피해벼의 수확 직후 매입 및 매입가격 현실화 검토 필요 ○ 깨씨무늬병 피해 벼의 전량 수매 및 적절한 매입단가 설정 필요 ○ 수발아 피해의 사전 예방 및 피해벼의 충분한 매입 필요 ○ 주정용, 가공용 쌀 할인 판매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 및 시장 불안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쌀가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가공용 쌀 원료곡의 수급 안정 방안 마련 필요 ○ 충남권 내 가공용 쌀 생산단지 시범사업 추진 검토 필요 ○ 간척지 내 가공용 쌀 재배 시 전략작물 인정 검토 필요 ○ 전략작물직불제 운영 시 알팔파의 하계조사료 인정 검토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수출용 즉석밥에 미국산 쌀이 아닌 국산 쌀을 사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가루쌀, 콩, 밀 등 전략작물 재배 유도 시 소비진작 대책 마련 필요 ○ 지역·작기별 감축면적 상한 및 비상시 완충장치 등 정교한 제도 설계를 통한 전략작물 육성 및 쌀값 안정의 동시 달성 필요 ○ 국가데이터처 양곡소비량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재해 예방을 위한 콩의 녹비작물 또는 동계작물과의 이모작 검토 필요 ○ 논콩 수매의 차질 없는 이행 및 과잉생산에 대응하기 위한 콩 수매예산 추가 확보 노력 필요 ○ 수입콩 할인 판매에 따른 국산 콩 가격경쟁력 문제 해결 및 대두 수입량 확대 자제 필요 ○ 신동진 벼의 보급종 공급 중단 재검토를 통한 전북 대표 브랜드 유지 필요 ○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 배송사업 참여 포기로 이어지는 영업용 차량 번호판 부착 의무에 대한 유관 부처와의 협의 및 대책 마련 필요 ○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쌀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정확한 RPC 유통 현황 파악 및 조사 방식 개선 필요 ○ RPC 운영 효율화 및 RPC 수익의 농가 환원 방안 마련 필요 ○ 통합RPC만을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으로 하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현행 사업구조의 개선 필요 ○ 가루쌀 정책의 유지 여부 및 규모에 대한 조속한 점검 필요 ○ 가루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분비, 인건비 등 생산비 지원 검토 필요 ○ 체계적이지 못한 밀 소비량 조사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소비확대 중심의 국산 밀 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지방이양 수리시설의 개보수 및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4대강 보 개방 시 농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필요 ○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양수장 시설개선으로 인하여 노후 양수장의 시설개선이 지연되는 문제 개선 필요 ○ 농지의 규모화 및 첨단 농기계 활용을 위한 농지대구획정비 사업 정책의 추진 필요 ○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가 사용하는 명칭이 상이한 저수지에 대한 조사 및 명칭 일원화 필요
축산	○ 흑염소 수입 급증으로 가격 하락 및 원산지 표기 위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산 흑염소 산업 발전을 위해 이력제·수입조절 등 대책 마련 필요 ○ 가을 장마에 따른 벼짚·조사료 수급 대책 필요 ○ 스마트축산 확산을 위한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 및 집중적 투자 필요 ○ 축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생산·가공·유통이 연계된 스마트축산 시스템 구축 적극 지원 필요 ○ 축산물품질평가원 통상임금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방안 마련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한돈육성법 제정 협력 필요 ○ 가축시장 온라인 거래체계 고도화를 위한 R&D 등 추진 필요 ○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목표율을 적용하는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라 양돈농가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동물복지축사 활성화를 위한 동물복지 도축장 설치방안 마련 등 대책 필요 ○ 원유 및 유제품 소비확대 등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참여한 유업체가 낙·축협과의 계약물량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양돈농가 슬러지 배출 주기 단축 등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저메탄사료 보급 등 축산농가의 저탄소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사업 개선 필요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실적 개선 및 성과지표 보완 검토 필요 ○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지원 사업 예산 반영 필요 ○ 생활승마대회 지원 확대 및 경주 퇴역마 관리 제도 검토 필요 ○ 승용마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및 승마체험 확대 필요 ○ 조사료 운송비 문제 개선 및 생산 지원 확대 필요 ○ 고령화, 신규진입 단절, 자금률 하락 등으로 인한 축산업 지속가능성 유지 대책 검토 필요 ○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전 사육 농가에 대한 임신돈 군사공간 설치 및 고정틀 사육기간 제한 의무 제외 방안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검토 필요
유통소비	○ 버섯 배지의 폐기물 분류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및 버섯산업 육성법의 제정 가능성 검토 필요 ○ TRQ 양과 물량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낙과·열과 피해를 입은 저품위 사과에 대한 수매 지원 검토 필요 ○ 물가안정을 위하여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률 문제를 개선하거나 정부·공공기관의 직접 운영 필요 ○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결과의 농가소득 증대 효과에 대한 검증 필요 ○ 물가안정을 위하여 할당관세 등의 일시적 대응이 아닌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구조적인 전환 수행 필요 ○ 한-에콰도르 SECA 비준에 따른 화훼산업 대책 마련 필요 ○ 화훼농업 예산지원 확대 및 화훼농업의 지속가능성 점검 등 화훼농가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온라인 유통 농축산물의 수수료 및 정산주기 등에 대한 공정한 감독체계 마련 필요 ○ 도매시장 내 경쟁 확대를 위하여 시장도매인,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의 다양성 확대 검토 필요 ○ 샤인머스켓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 전북 김제 지역 비축기지 건립 검토 필요 ○ 부산 학장 비축기지 이전의 실질적인 추진계획 마련 필요 ○ 안정적인 농산물 저장·유통을 위한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확대 필요 ○ 원산지 표시 위반 군급식 납품업체에 관한 조속한 후속조치 필요 ○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실질적인 유통구조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점검 및 개선 필요 ○ 청년농에게 온라인도매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매출기준의 완화 필요 ○ 온라인도매시장 신규 진입 시 준비 및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필요 ○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나타나는 이상거래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개선 조치 필요 ○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제주 농산물 물류비 절감 필요 ○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전통시장 예산 비중이 확대되도록 근본적인 전환 필요 ○ 농할상품권의 지역적 사용 편차 문제 해결 필요 ○ 채소가격안정제의 예산 집행률 저조 원인 파악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 반영 필요 ○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농산물 유통 대란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필요 ○ 정부비축사업 평가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주관하고 외부 검증 및 투명한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농림축산 검역	○ 동물용의약품 불법 수입·유통 근절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 체계 고도화 필요 ○ 메틸브로마이드의 위해성 입증 이후에도 지속되는 검역본부의 소극적 대응 개선 및 친환경 대체 소독 기술 전환 등 종합적인 대책 강구 필요 ○ 해외 유입 가축질병 및 병해충의 원천 차단을 위한 국경검역 현장 단속 강화 및 대국민 인식 제고 필요 ○ 주요 수입절화 대상 국경검역 강화 및 소독시설 현대화, 친환경 훈증 기술 도입 등 검역시스템 고도화 필요 ○ 제주·강정항 등 국제 크루즈 여객 급증에 따른 검역 공백 방지를 위해 인력·장비 확충 등 차질 없는 검역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식물검역 행정의 지능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구축 ISP 용역비 등 관련 예산 반영 필요 ○ 농림축산검역본부 비연고 근무자 및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실효적 주거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조류독감 유전자 검출 중국산 오리 가공육에 대한 검역 관리 체계 강화 필요 ○ 가축전염병 백신의 신속한 개발 및 적기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체계 구축 필요
농산물품질 관리	○ 농업경영체 조사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민원수당 및 위험수당 신설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명예감시원 제도의 관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필요 ○ 온라인 플랫폼 단속 시 특정 플랫폼 집중단속에 따른 사각 지대 발생 문제 해결 필요
한국농수산 대학	○ 실습생에 대한 실습비 현실화, 산재보험 가입 등 제도 개선 필요
종자관리	○ 기후변화 대응의 선제적 테스트베드인 제주 내 국립종자원의 아열대 작물 전문교육 인프라 확충 등 기반 조성 필요

2. 농촌진흥청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농정	○ 국산 농기계 R&D 고도화 및 보급체계 개선 등 농업기계화율 확대를 위한 실효적 대책 수립 필요 ○ 연구개발 농기계의 현장 보급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 필요 ○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 및 실용화율 향상 등 보급 종합계획 마련 필요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 ○ 퍼지컬 AI 기술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필요 ○ 밀원식물 확충 및 꿀벌 품종개량 등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농업 위성 활용 적시성 확보를 위한 지상 연계 R&D 조기 착수 및 데이터 활용 로드맵 재편 필요 ○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R&D 투자 확대 등 국산밀 경쟁력 강화 노력 필요 ○ 국산 저메탄사료 연구개발 강화 필요 ○ 국유특허 실용화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종자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품종 개발 및 보급 체계 고도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치유농업·농촌체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영농부산물의 자원화 촉진 및 실효적 통합관리 이행 체계 구축 필요 ○ 청년농 경쟁력 제고 및 학습단체 육성 등 미래 농업 인력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예산 복원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가축분뇨 부숙도 점검 및 관리 강화 필요 ○ 품종 개량 및 방제·교육 내실화 등 기후변화 대응형 깨씨 무늬병 예방 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지역별 맞춤형 과수화상병 방제 전략 마련 등 안정적 영농 환경 조성 필요 ○ 대설피해 기술지원 사업 추진 필요 ○ 농업·안전 R&D 추진 확대 및 실효적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및 관련 예산 확대 등 실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 농업인 생명 보호를 위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분해 완효성 비료 현장실증 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 등 활성화 대책 강구 필요 ○ 클로로탈로닐 안전성 재평가 및 안전사용 대책 마련 필요 ○ 글로벌농업인재양성사업의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전면 재설계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고령농 맞춤형 스마트농업 교육 내실화 및 디지털 농업 기술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담인력의 기술 역량 강화 교육 내실화 및 현장 안전지도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신동진벼 공급 중단 결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재배농가 의견 수렴 및 표준 매뉴얼 수립 등 행정의 투명성 제고 필요 ○ 지역 간 생산·소비 불균형 해소 및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모델 시범사업」 확대 필요 ○ 제주 신소득 작물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등록 농약 인프라 확충 및 소면적 작물 대상 PLS 운용 합리화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모바일 앱 개발 및 고령 농업인 맞춤형 활용 방안 마련 등 가입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북한 지역 맞춤형 농업 기술 R&D 재추진 필요 ○ 지속적인 야생동물 피습 사고 방지 및 농업인 생명 보호를 위한 관련 R&D 추진 필요 ○ PO필름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제품 품질 기준 표준화 등 실효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저탄소 농업 확산을 위한 바이오차 실증 모델 고도화 등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학사·사업 일정과 연계한 파견기간 최적화 등 KOPIA 연구원 중도귀국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공인기관 기 수행 약효·약해시험 성적 인정을 통한 신속 등록 체계 구축 필요 ○ 농기계 검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검정 기준 고도화 및 부실 검정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적 보완 필요 ○ 시비처방서 기준 액비 살포량의 일률적 제한 완화 등 비료관리법령 개정 필요 ○ 규모화 농지의 생산성 극대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신농법 개발 및 현장 보급 확대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지 변동 대응을 위해 권역별 특화작목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전환 전략 수립 필요 ○ LMO 감자 심사위원회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필요 ○ 국립농업과학원 등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전문연구원들의 높은 중도 퇴직률 개선 필요 ○ 현장 맞춤형 기술 혁신을 위해 대형 첨단 농기계 사업 권한 농촌진흥청으로 이관 검토 필요 ○ 국내 농업환경에 최적화된 ‘한국형 농업용 드론’ R&D 강화 및 현장 보급 활성화 노력 필요 ○ 농촌진흥청 미활용 특허 비중 축소 및 기술 이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개발 농기계의 미흡한 현장 보급 실적 개선 필요 ○ 식방풍의 인지능 개선 효능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증 가속화 및 조기 실용화 대책 마련 필요 ○ 여성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 필요 ○ 불법 개조 농기계에 대한 인증 무효화 검토 필요 ○ 농촌진흥청의 부실한 사업 관리로 인하여 실패한 서울 남부 터미널 등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살인진드기(SFTS)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한 기피제·방충복 지원 등 관련 예산 편성 필요 ○ GMO 작물 시험재배 시 GMO 유전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운영	○ 수원 잔류부서의 전북 적기 이전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정기 보고 필요 ○ 매년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농촌진흥청 자체 대책의 실효성 점검 및 감사원 감사청구 검토 필요 ○ 청사미화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등 공무원 처우개선과 차별없는 근무환경 조성 필요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상임이사 임기만료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및 상임 부원장직 확대 등 기관운영 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 ○ 관리자급 공무원들의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상향식 다면평가 제도 도입 등 실효적 인사관리 체계 구축 필요 ○ 농촌진흥청 웹사이트 통합 및 모바일 앱 전환 등 운영 효율화와 사용자 접근성 제고 필요 ○ 포장·온실관리원의 상시직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성 확보 필요 ○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직들이 연구성과만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제도의 내실화 등 인사시스템 개선 필요

3. 산림청

분야별	감 사 실 시 내 용
국제 산림 협력	○ 해외파견 계약직 채용제도 개편 필요 ○ 수입목재 관리 강화를 위한 「목재이용법」 개정 필요 ○ 목재분야 관세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남북산림협력사업 계획 개선 필요 ○ 남북산림협력사업용 묘목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산림 산업 정책	○ 칩덩굴 생태계 교란종 지정 협의 및 제거 대책 강구 필요 ○ 산불 진화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연구개발 필요 ○ 산림보호구역 관리 체계의 문제로 피해를 입은 산양삼 재배 임가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소나무재선충병의 이동경로가 되지 않도록 산불예방 숲가꾸기 관리·감독 철저 필요 ○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선정이 개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임가소득 향상을 위한 임업 관련 세제 개편 및 실효적인 정책 마련 필요 ○ 산림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문제 관련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산림경영(벌채, 숲가꾸기 등)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통한 정책 재정립 필요 ○ 국내 목재산업 성장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분야별	감 사 실 시 내 용
	○ 산불피해 지역에 따른 맞춤형 복원 필요 ○ 임산물(임목)재해보험시스템 운영의 정상화 필요 ○ 산림사업주체 간 역할 재정립으로 상생 발전 도모 필요 ○ 조림사업 시행체계 및 수종 구조 개선 필요 ○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 조정 관련 적극 대응 필요 ○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종합 점검 필요 ○ 임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공·정비 기준 강구 및 품질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 ○ 산지 무단형질 변경 후 셀프허가 근절 필요 ○ 국유림 무단점유지 관리 및 변상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감사결과 조치 이행 현황 공개, 점검 강화 등 숲가꾸기 사업 제도 개선 및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기계톱 사용 시 친환경오일 이용 확대 필요 ○ 경기도 가평군 관련 별채와 산사태 간 상관관계 규명 필요 ○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국산목재 확인제도, 우선구매제도 등 홍보 강화 필요 ○ 임업기계장비 운용 활성화 필요 ○ 밀원수를 조림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선택형 직불제 도입 필요 ○ 산불피해목 활용 방안 강구 필요 ○ 국유재산이 불법 점유·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필요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검토 필요 ○ 임업직불금 자격 요건 개선 필요

분야별	감 사 실 시 내 용
	○ 불법 목재제품 시중 유통에 대한 대책 필요 ○ 국가유산영향진단 지표에서 목재수확 제외 필요 ○ 원활한 솥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임업인 피해보상제도 구체화 및 피해지 복구체계 개선 필요 ○ 노지표고버섯, 마, 더덕 등 임산물재해보험 가입 대상품목 확대 필요 ○ 산불피해목이 고부가가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책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산림 복지 및 산지 이용	○ 산악구조대 운영 의무화 등 「산림휴양법」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산림항공구조대 자격 강화 및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확대 필요 ○ 숲길 조성 시 타당성평가 예외 조항 개정 및 지방이양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숲길 통합데이터 플랫폼 구축 필요 ○ 공공 수목장 조성 확대 및 사립 수목장 평가 인증제 도입 필요 ○ 「산불특별법」 상 산림투자선도지구 조항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필요 ○ 법령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 관리 철저 필요 ○ 산림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필요
산림 보호	○ 과거 도시숲 조성사업 대상지 전수조사 및 산림조합과 계약 시 부가세 부당지급 사례 실태조사 필요 ○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산림 내 불법 야영 등 단속 대책

분야별	감 사 실 시 내 용
	마련 필요 ○ 새만금수목원 조성 시 지역업체 계약 및 인력 고용 비율 확대 필요 ○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 필요 ○ 산림약용작물 산업화단지 조성 필요 ○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대응 강화 필요 ○ 섬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복원 지속 추진 필요 ○ 청원산림보호직원 처우개선 필요 ○ 생태계 교란 식물 방제 지원 필요 ○ 국내 희귀수종 보호 및 산업화 방안 마련 필요 ○ 국가정원 지정 절차 개선 및 지방정원·민간정원에 대한 사업비 등 보조 필요
산림 재난	○ 산불관제시스템, 재난문자알림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실시간 산불정보시스템 관리 방안 강구 필요 ○ 국산 드론 개발을 위한 예산의 적극적 활용 및 드론 수입 국가 다변화 필요 ○ 스마트 산불감시(ICT 플랫폼, CCTV) 관련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연령 하향 및 처우개선 필요 ○ 실시간 산사태위험도 시스템 과부화로 인한 산사태 예·경보 미비 문제 개선 필요 ○ 산불 대응 시 위성 활용 방안 마련 필요

분야별	감 사 실 시 내 용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대응을 위한 현장 점검, 방제기술 고도화, 예산 구조 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 ○ 소나무재선충 훈증더미 적기 제거를 위한 시스템 연동 등 상시 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지방자치단체 산불진화 헬기 구입·임차 비용 등의 국비 지원 확대 필요 ○ 산불 발생 시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산불현장 지휘체계 강화 필요 ○ 산악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체계 개선 필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친환경 러브버그 방제대책 마련 필요 ○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라 산림재난 발생 시 산림청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철저한 대응 필요 ○ 땅밀림 위험지도 제작·공개 등 땅밀림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내병성 품종 개발, TF팀 구성 및 해외 사례 참고 등 방제 전략 전환 필요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방제 중심 정책에서 수종 전환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 ○ 러시아산 헬기 MRO업체의 「관세법」 위반 혐의에 따른 구형에 대한 대응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규정 개정 필요 ○ 산불진화헬기 가동률 제고를 위한 신규헬기 도입 등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 ○ 생활권 중심으로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 및 대피체계 구축 필요

분야별	감 사 실 시 내 용
	○ 재제작 헬기 부품 수급 지연 원인과 대책 마련 필요 ○ 상황별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차량 등 활용 기준 마련 필요 ○ NDMS 사유재산 피해 입력 항목 확대 관련 부처 협의 필요 ○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사태위험등급 관리 부실 개선 필요 ○ 산림항공본부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 민간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선 필요 ○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지자체 예찰용 드론감시단 지원 필요 ○ 산불 헬기 운용 조종사 확대 방안 필요 ○ 내실 있는 사방사업 추진 필요 ○ 산사태 복구 관련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 ○ 노후화된 사방댐 유지·관리 강화 필요 ○ 치산기술협회 관리감독 체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포항 사방기념공원 국가기관 전환 필요 ○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정확도 개선 필요 ○ 대형헬기 구매사업 관련 사실관계 확인 필요 ○ 산불지휘체계 통합을 위한 예방·진화 역량 강화 필요 ○ 천연기념물 소나무의 재선충병 예방 철저 필요
운영·조직	○ 산림청장 임명 관련 인사 개입 의혹과 산림 분야 전문성 부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 ○ 산림청장에 대한 성남시 백현동 환경영향평가 및 성남의제 21실천협의회 관련 논란 규명 필요 ○ 중증장애인 의무구매율 향상 및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 갑질 실태조사 응답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4. 한국마사회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서초부지 및 YTN 지분 매각시 정부의 압박 여부 확인 필요 ○ 직원 자녀 및 친인척의 경마지원직 채용 문제 개선 필요 ○ 직위 미부여 제도 운영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여성 임원 부재에 대하여 시정 필요 ○ 마사회 유튜브 콘텐츠의 성인지 감수성 및 사회적 책임 제고 필요 ○ 계약 과정에서 조직적 도덕불감증 점검 필요 ○ 사내 변호사 보유에도 소송업무를 외부 변호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내 법무팀 기능 강화 필요 ○ 마사회 전산관리 예산 및 인력 강화 필요 ○ 임원에 대해서도 질병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규 개정 검토 필요 ○ 사행성 확산 방지 목적의 온라인 발권이 오히려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는 실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경마	○ 한국마사회 정식 등록 업체로 허위 광고·홍보하는 사설 리딩방을 포함한 불법경마 문제 개선 필요 ○ 영천경마공원에 경주마를 정상적으로 배치한 상태에서 경마 시행 필요 ○ 영남권 경마의 지역간 공정한 레저세 배분 방안 검토 필요 ○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노력과 관련 예산 확대 필요 ○ 마권 구매 상한제 실효성 제고 및 마권 실명 구매 확대 필요 ○ 경주 전 도핑검사 축소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 마주 자격 사후관리 강화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말산업	○ 경주은퇴마 관리 책임 촉구 및 대책 마련 필요 ○ 경마상금이나 매출의 일정비율을 말 복지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말 복지기금 확보 필요 ○ 민간승마장 강습비 지원 기준 및 사후평가 보고 필요 ○ 레클리스와 말산업을 연계한 행사계획 마련 필요 ○ 말 생산농가 지원 등 말산업 육성 지원 확대 필요 ○ 제주경마 시행횟수 확대, 우수경주마 생산장려금 확대, 제주마 품평회 활성화 등 제주마 생산 기반 강화 대책 마련 필요
기타	○ 새만금, 전북 또는 영천으로 본사 이전 검토 필요 ○ 마사회 유실물 처리 방법 개선 필요 ○ 마사회 장학관 운영 사업 유지 필요

5. 한국농어촌공사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공사 청렴도 개선 및 민원 지연 등에 대한 시정 필요 ○ 1년 미만 단기 재직자 퇴직 지속 관련 방안 마련 필요 ○ 자녀수당을 지급한 이후 회수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에서 5년 연속 지적 받는 사항 개선 필요 ○ RE100 홍보 콘텐츠 검수 체계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수자원관리 및 안전관리	○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의 수질기준 불일치 문제 해소 및 농업용수 수질기준 상향 추진 필요 ○ 극한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배수시설 개선 및 예산확보 대책 마련 필요 ○ 기후적응형 배수시설 기준의 조속한 마련 및 용수시설 통합 운영관리시스템(TOMS) 확대 검토 필요 ○ 오봉저수지에서 생활용수 과다 공급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책무를 다할 필요 ○ 오봉저수지 농업용수 공급 중단 관련 강릉시 공문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 ○ 서귀포 소정방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 방안 모색 필요 ○ 전기시설의 저지대 위치에 따라 침수 우려가 있는 배수장의 조속한 이전 완료 필요 ○ 71세 이상 고령자의 수리시설 감시원 업무 수행 문제 개선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필요 ○ 수리시설 자동화율 제고 및 자동화 사업 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노후화된 저수지의 근본적인 개선 사업 수행 및 수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 필요 ○ 저수지 내 사전 방류시설 설치 확대 필요 ○ 수리시설 내 안전대책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노력 및 연차계획 마련 필요 ○ 수문 개방식 콘크리트 댐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저수지 안전을 위한 CCTV 관제시스템의 개선 검토 필요 ○ 진주 명석면 침수사고의 책임소재 파악 및 후속 대응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용수 재이용률 향상 방안 마련 필요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 시스템 마련 필요 ○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전문인력 마련 및 사업준비 진행 필요 ○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 대상지 선정 시 지역균형 방안 마련 필요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저조한 집행을 개선 필요
농지은행 및 농지관리	○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부과제도 폐지 검토 필요 ○ 친환경 농업의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위해 친환경농업인에 대하여 농지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제도 개선 검토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농지 집단화를 위해 농지은행 임대방식 개선 검토 필요 ○ 농어촌공사 임대수탁 농지의 임차인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 실태를 점검하고, 원상복구 비용 등 소유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 경영회생사업 예산 감소와 관련하여 예산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기타	○ 새만금산단 4·9공구 조속한 추진 필요 ○ 해외농업 자원개발사업 재검토 필요 ○ 익산 망성면 지역 배수개선사업의 면밀한 시행 필요 ○ 어촌개발 관련 예산, 인력 확보 필요 ○ 국가농업 AX플랫폼 사업의 준비 철저 필요 ○ 캄보디아 현지 한국직원의 안전조치 필요 ○ 수원 고색지구의 농지 수의계약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필요

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수급안정	○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의 철저한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마련 필요 ○ 할당관세 배정 품목별 사후평가체계 마련 필요 ○ 물가안정 효과가 제한적인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의 축소 필요 ○ 수입농산물 반송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품질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수급 상황을 고려한 TRQ 수입시기 검토 및 개선 필요 ○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효과가 유통업체로 귀속되지 않도록 재검토 필요 ○ 논콩 소비활성화 방안 수립 필요 ○ 가루쌀 시장 확산 및 소비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수출진흥	○ 샤인머스켓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및 판로개척 노력 필요 ○ 수출전문단지 조성 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국산 쌀 소비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신시장 판로 확보를 통한 농림수산물 수출 강화 및 특정 국가 수출 쏠림 현상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유통개선	○ 소매유통 단계의 유통비용 절감 대책 마련 필요 ○ 시장도매인제도 및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역할 및 대책 마련 필요 ○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외 하역비 징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조치 필요 ○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 과정 상 공급업체 관리 부실문제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개선 필요 ○ 온라인도매시장 참여율 제고 및 활성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노력 필요 ○ 온라인도매시장 내 수입 농수산물 비중 확대 문제 개선 필요
식품산업 육성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신규기업 지원 확대 및 사업의무 이행관리 강화 등 개선 필요 ○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한 현황조사 및 사업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며, 다양한 제품의 판로확대 및 지원을 우선할 필요 ○ 공공배달 통합포털사이트 활성화 및 지속 방안 마련 필요
기타	○ 자녀수당 도입 방안 검토 필요 ○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의 대출한도 및 금리 관련 정부지침 준수 필요 ○ 사이버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7. 축산물품질평가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축산물 등급 제도	○ 돼지등급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 필요 ○ AI 솔루션 도입을 통한 품질·등급체계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필요 ○ 축산물이력제 허위정보 입력 등 위법행위 단속이 미흡하므로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
축산데이터 활용	○ 축산유통 디지털 플랫폼 활용 확대, 분석 자료의 농가 및 유통업체 제공 검토 필요
저탄소 축산물 유통 활성화	○ 저탄소 인증축산물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기관운영	○ 기관장 상임화에 따른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방역본부 공무원 등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등 조직 안정화 방안 마련 필요

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기관운영	○ 연구직 직급별 정년 격차 개선을 통한 인적 자원 관리의 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방안 마련 필요 ○ 승진심사 제도 개선, 장기 근속자 우대 및 자동 승진 제도 도입 등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연구 부정행위에 따른 환수금 중 미환수 금액의 조속한 환수 필요
연구개발 사업 평가관리	○ 미진한 가축전염병 국내백신 기술 제고 필요 ○ 첨단기술분야, 지역균형발전 분야 등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R&D 예산 증액 및 대책 마련 필요

1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농업정책 보험 사업관리	○ 농업재해 피해 현황 관리체계 마련, 신고율 제고, 피해액 산정의 신속성·공정성 확보 등 제도개선 필요 ○ 감귤·만감류 재해보험 보상기준 개선 필요 ○ 낙과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조사자를 파악하고, 피해 인정과 관련한 현장 보존 및 피해 산정 기준과 개인별 보험률 적용에 대해 검토 필요 ○ 임목 관련 보험 상품 개발 방안 마련 필요 ○ 농업 정책자금의 부적정 집행이 적발돼도 지자체나 농협이 자체 판단으로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정상화 조치’는 감독의 실효성을 훼손하므로, 정상화 조치 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11.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기관운영	○ 공항만 외래병해충 분포조사의 체계적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내 전담 인력 확보 필요

1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사업관리	○ 빈집은행이 일부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의 사유를 파악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할 필요 ○ K-푸드 해외 온라인 반응 및 인식 분석 조사의 지속 추진 필요

13. 한식진흥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인사기록카드 내 개인정보 관리 개선 필요
사업운영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한식 및 K-FOOD 홍보에 대한 지원계획 마련 필요 ○ 한식진흥원 사업 홍보 효과와 파급력을 높이는 방안 모색 필요 ○ 한식 인지도 제고 및 한식 세계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14.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사업운영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장에서 나아가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의 역할 수행 강화 필요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지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문제 개선 필요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중소 식품기업들은 자체 복지·교육 여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필요

15. 축산환경관리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동물복지 축산농장	○ 동물복지축사 활성화를 위한 동물복지 도축장 설치방안 마련 등 대책 필요
축산환경	○ 양돈농가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조속한 추진 필요 ○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른 양돈농가 지원책 필요

16.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보상 현실화 및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인사적체 해소와 경력개발 지원 등 근로조건의 근본적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상임이사 임기만료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및 상임 부원장직 확대 등 기관운영 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 ○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과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는 등 노사 신뢰회복 및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 필요
주요 사업	○ 국내 사료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종자생산 기반 마련 필요

17. 한국임업진흥원

분야별	감 사 실 시 내 용
임업	○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산림보호구역 관리 체계의 문제로 피해를 입은 산양삼 재배 임가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귀산촌 교육 재추진 방안 마련 필요 ○ 한국산림인증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기타	○ 갑질 실태조사 응답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해당사항 없음

19.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분야별	감 사 실 시 내 용
수목원	○ 지역상생사업 예산 확보 등 사업지속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백두대간수목원 홍보 전략 및 미래세대 유치 방안 마련 필요
기타	○ 갑질 실태조사 응답률 제고를 위한 참여 촉진 대책 마련 필요 ○ 국산목재 우선구매 목표 달성 필요

20.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해당사항 없음

21. 한국치산기술협회

분야별	감 사 실 시 내 용
조직관리	○ 한국치산기술협회 관리감독 체계 개선방안 마련 필요

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농협중앙회	○ 중앙회 여성 직원이 차별받지 않는 기준 마련과 여성 임원 확대 필요 ○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장애인고용비율 및 중증장애인 생산물 구매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농협의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농협퇴직자 단체인 농협동인회에 대한 무상지원 중단 필요 ○ 중앙회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현행 구조에서 상임회장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보수 수준 부적절하므로 시정 필요 ○ 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보전제도 운영 부적절하므로 시정 필요 ○ 농협중앙회 주사무소 이전 검토 필요 ○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전문가, 노조대표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공개모집 의무화 등 필요 ○ 조합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임원 의무도입 미준수 조합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여성조합원의 복리후생 및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전담부서 신설 검토 필요 ○ 지역조합 젊은 직원 퇴사 증가에 따른 조직문화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서울중앙농협 골드바 지급 사건 등과 관련하여 지역조합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지역조합 예산집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업무추진비 선심성 지급 재발 방지방안 마련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임원의 겸업금지 위반 방지를 위하여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보완대책 마련 필요 ○ 부정이나 비리, 성비위 혐의 등으로 공소 제기된 조합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상임이사 등 임원 의무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을 이행하지 않는 지역농협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대책 강구 필요 ○ 지역조합 공사 과정에서 저가 발주로 인한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금융당국의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으로 지역조합의 조합원 배당 축소와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상향 적용 시점을 2026년 6월까지 추가 유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 ○ 적자 조합 경영평가 기준 및 성과급 기준 개선 필요 ○ 지역조합의 적자 확대와 연체율·부실채권 증가로 인한 부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부실우려 조합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자구노력 이행 여부 점검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 지역조합의 적자가 부동산 PF 투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로 인한 부담이 농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중앙회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지역조합 금융사고 근절방안 마련 및 자체감사 실효성 제고 필요 ○ 지역조합의 태양광 관련 대출상품의 구조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상품을 정비하여 부작용 방지 필요 ○ 지역조합의 보이스포싱 대응을 위한 인력충원, 교육강화, 시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시스템 보강 등 제도개선 필요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조합원들에 대한 예방 교육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액에 대한 보증보험 도입 등 방안 강구 필요 ○ 농협네트웍스가 쌀과자 제조기를 보급하는 입찰 과정에서 업체와 유착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다른 물품 구입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 필요 ○ 영남채소농협에 대한 회원가입 지원 필요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필요 ○ 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 영농정착률 제고 대책 마련 필요 ○ 농업분야 세제감면 축소, 교육세율 인상으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무궁화신탁의 인맥 중심 공격적 영업으로 조합 상호금융 부동산 신탁대출 부실이 급증했는데, 상호금융 부동산대출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국가 농업 AX 플랫폼 사업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마련 필요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기금 규모 및 보증 범위 확대에 따라 실무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직급별 인력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농협금융상품 인증과 관련한 위조신분증 사기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철저한 보안시스템 구축과 적극적인 기술투자를 통해 피해 발생 예방 필요
농협 경제지주	○ 일부 농축협의 면세유 취급수수료(2%) 부과에 대한 실태파악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및 대안 마련 필요 ○ 공영홈쇼핑 이중수수료 부과 문제 개선 필요 ○ 농협유통 구매권의 유통자회사 이관 대안 마련 필요 ○ 샤인머스켓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 애로사항 해소 노력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내 논콩 가공공장 설치 검토 필요 ○ 지역별 RPC 벼 수매 가격 격차 해소 노력 필요 ○ RPC에서 수매가격에 쌀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 필요 ○ 남해화학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 분석 및 대체근무제 개선방안, CCTV 설치 등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남해화학의 적자 발생 문제 시정 필요 ○ 농협 전기차충전시설 내 화재 진화장비 현황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 필요 ○ 농협하나로유통 당기순손실 지속 발생에 따른 사업혁신 방안 모색 필요 ○ 농협하나로마트 내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 제고 및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노후화된 양곡창고의 조속한 개선 필요 ○ 농협 공판장의 수입농산물 판매에 대한 취급원칙 및 제한기준 마련 필요 ○ 농협 공판장에서 하자육 발견 시 농가에 변상 요구 제도 개선 필요 ○ 호남 등 세부 가공이 제한된 미트센터의 추가 가공설비 필요 ○ 주산지 중심의 생산자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군 당국과의 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굴 군납 관련 사항 협의 및 이중수수료 문제 해결 필요 ○ 군급식 관련 수의계약 유지 및 국산 식재료 우선 공급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농협의 공익적 관점에 따른 홈플러스 인수 가능성 검토 필요 ○ 농협의 비료가격 결정시스템, 입찰시기 및 조정 주기에 대한 개선 검토 필요 ○ 농협유통 및 농협하나로유통 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농협몰 및 라이블리의 통합운영 및 경영혁신방안 마련 필요
농협 금융지주	○ 농업인의 금융 이해도 제고와 건전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교육을 활성화할 필요 ○ 자본시장 선진화 역할 선도 필요 ○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사기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임직원에게 대하여 구상권 행사, 채권보전 조치 등 책임을 물을 필요
농협은행	○ 캄보디아 등 해외로 불법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 사후 모니터링 등 대책 마련 필요 ○ 해외 단체에 대한 기부 시 사전검증과 자금사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착오송금 반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 필요 ○ 농협은행 금융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으나, 기존 대책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특단의 개선대책 마련 필요 ○ 농협은행-지역조합 간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위탁 약정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농협은행-지역조합 노동자 간 보험판매 보상 등에서 차별이 없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농협은행이 판매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 필요 ○ 지자체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농협과 상생방안 마련 필요 ○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대출 과정 등에 대한 점검 필요 ○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농협 생명보험	○ 판촉물 계약 및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농협 손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갱신 계약 시 적용되는 가입조건에 대한 개선 필요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논콩, 벼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 관점에서 대책 마련 필요 ○ 정책보험 손익 적자와 관련하여 가입률 제고, 부실채권 관리,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 신용 위험 경감 대책 마련 필요 ○ 짧은 감 낙과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조사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농가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방안 마련 필요 ○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자동차보험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필요

23. 산림조합중앙회

분야별	감 사 실 시 내 용
임업	○ 산불예방 숲가꾸기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 묘소 훼손 등 사건·사고에 대한 조합의 처리 및 보상 규정 등 개선 대책 필요 ○ 유통 및 판매부분 운영 적자와 온라인 판매 부진에 대한 개선 대책 필요 ○ 임산물(임목)재해보험시스템 운영의 정상화 필요 ○ 산림조합 티슈카페사업 관리·운영 방안 개선 필요 ○ 산림사업 시행 시 문제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필요
금융	○ 산림조합의 여신건전성 악화에 따른 조합의 개선 방안 및 중앙회 차원의 정상화 방안 마련 필요 ○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필요
기타	○ 전기차 과충전 방지장치 및 화재진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4. 해양수산부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해 양	○ 서해 중국 불법 구조물 설치 및 해양조사 방해 등으로 우리의 정당한 해양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 대응 필요 ○ 中 서해 구조물 관련 적극 대응 및 해양조사선·해경의 현장 인력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증거 확보 필요 ○ CPTPP 가입 검토 및 한-말 FTA 체결 관련 대응 필요 ○ 북한 우라늄 공장 폐수 배출 문제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대응 필요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핵종에 대한 검사 검토 필요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기후변화 대응 시책 규정 필요 ○ 해양보호구역 30by30 목표 달성을 위한 실현 과제 및 방안 마련 필요 ○ 블루카본 사업이 공원 조성 중심으로 변질된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시 어업인의 삶의 터전과 해양생태계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필요 ○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 해상풍력 관련 자연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부 차원의 적절한 관리 필요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등 해양레저 관련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균형 추진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지자체별 사업 중복 방지를 위한 해양관광·레저 연계벨트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전북지역 특화형 크루즈 특구 적극 검토 필요 ○ 연안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순항 여객운송사업 면허 조건 완화 필요 ○ APEC 대비 해양 분야 안전대책 마련 필요 ○ 비지정 해변의 안전관리 공백 해소를 위해 해수욕장법에 비지정 해변 관리 조항 신설 필요 ○ 전국 해수욕장 중 동력해상기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종할 면허소지자가 태부족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해수욕장 안전체계 마련 필요 ○ 해양전시시설 내 장애인 관람 지원 서비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양식장 피해 보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관측부이 정기 점검 주기 규정화 필요 ○ 충남지역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 건조 지원 필요 ○ 해양환경정화선 추가 건조 등 해양쓰레기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해양쓰레기 수거비용 지원사업의 국고보조를 확대 필요 ○ 남해안(경남) 해양쓰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어항관리선 배치 필요 ○ 김 판매기업의 독도경비대 기부 관련 허위·과장 광고 여부 확인 필요 ○ KRISO 해킹 사고 발생과 관련한 사이버 침해사고 보완·개선 방안 마련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울진해양과학관장의 기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극지연구 전문인력 보충 필요 ○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해도의 민간 공개 여부 재검토 필요 ○ 해안사구 조사 및 보전·관리 지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수 산	○ MMPA(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대응 관련, 어묵이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MMPA 관련, 혼획저감장치 개발계획 등 적극 수립 필요 ○ 수산업 분야 대미 관세협상 후속 대책 마련 필요 ○ 한일어업협상 재개 노력 및 협상 이행 지연에 따른 어민 지원 대책사업의 제도개선 검토 필요 ○ 뱀장어 CITES 부속서 II 등재 관련 총력 대응 필요 ○ 해외 수산식품 위조·모방 제품의 진상 파악 필요 ○ 해외 위조·모방 수산식품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문제의 현황 파악 및 대책 필요 ○ 수산물 물가 상승에 대한 장·단기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수산물 할인대전 사업이 어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원점 재검토 필요 ○ 대형 유통업체에 지원이 집중되는 수산대전 예산 축소 검토 필요 ○ 온라인 유통업체의 높은 수수료 및 늦은 정산주기 문제 개선 필요 ○ 김 수출입 관련 정확한 통계 산출 필요 ○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예산의 전반적인 재점검 필요 ○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정보 공개 범위 확대 필요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내용 공개 및 이력 조회시스템 보완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수산물이력제 확대방안 마련 필요 ○ 중국산 활바지락 수입검역 강화 필요 ○ 일본 암컷대게 국내 유통문제 해결 필요 ○ 어선 화재·폭발 사고 저감 대책 마련 필요 ○ 어선원안전감독관 증원 노력 및 제도 개선 필요 ○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의한 우리 어선의 안전 문제 대비 필요 ○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절차 개선 필요 ○ 어업인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한 어업인 산재 통계 작성 필요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정부지원비율 확대 필요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 지급 불가내역에 대한 체계적 통계관리 및 사후분석 시스템 구축 필요 ○ 고수온 피해 관련 양식재해보험 특약 가입 어민 부담 경감 필요 ○ 자연재해 피해 보상 시 관측자료 부재 시 대체 판정 기준 마련 필요 ○ 패류독소 조사체계 개선 필요 ○ 폐어구 반환율 제고를 위한 관리정책 전반 검토 필요 ○ 어구부표 보증금 환급을 위한 폐어구 반납장소 운영 내실화 필요 ○ 수산부산물 자원화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이행 여부 관리·감독체계 마련 필요 ○ 고수온 피해에 대한 대체품종 개발 필요 ○ 수온상승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어업구조 재편 방안 마련 필요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조속한 도입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연안어업 총허용어획량 제도 확대 필요 ○ 연안어업 총허용어획량제도 운영 시 품목 확대 필요 ○ 어선 감척 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감척수요 대비 부족한 예산 확대 필요 ○ 어선 감척지원금 과세문제 해결 필요 ○ 정부가 감척 대상 어선을 매입해 청년에게 임대하는 방안 필요 ○ 건조중단 국가어업지도선 대응책 마련 필요 ○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및 인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해수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등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 ○ 내수면 관광·레저 연계 내수면산업 발전방안 마련 필요 ○ 가마우지로 인한 내수면어업 피해 대응 필요 ○ 내수면 어도 부실관리에 대한 조치 필요 ○ 내수면 양식 어가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대상 검토 필요 ○ 전남 지역 수산업계 소외 방지 위한 수산 분야 진흥 방안 마련 필요 ○ 전북 김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가공설비 지원 필요 ○ 영덕항 강구 등 지역 참다랑어 허브 항만 조성 필요 ○ 오분자기 등 제주 수산자원조성사업 정부 지원 필요 ○ 경남 국가중요어업유산관 설립 추진 필요 ○ 부안 낚시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 ○ 노후 위판장 현대화 대책 마련 필요 ○ 삼천포수협 위판장 현대화 예산 반영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자갈치시장 무상사용 협약기간 연장 등 지원 필요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미수립에 대한 조치 필요 ○ 어촌생활환경정비 방침 수립 필요 ○ 어촌뉴딜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필요 ○ 어촌 계절근로자 도입 지역별 편차 감소 대책 마련 필요 ○ 어촌·어항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I 활용 안전예측시스템 도입 필요 ○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조속 수립 필요 ○ 어업 분야 특성 고려한 청년어업인 지원사업 개선 필요 ○ 어업인 경영이양 직불제 제고대책 필요 ○ 어업인 고용보험 가입 독려 및 지원 필요 ○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조건 개선 필요 ○ 수산분야 농사용 전력 적용 확대 필요 ○ 수산관계법령 처분 기준 정비 필요 ○ 소금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 ○ 제6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 마련 필요 ○ 여성어업인 육성 사업 개선 필요 ○ 2025 어업인 의견조사 보고서 활용 필요 ○ 농어촌기본소득 사업과 섬마을 기본소득 사업 접목 필요 ○ 수협 부당대출 외부 감사 필요 ○ 추자수협 경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률 제고를 위한 보급·지원물량 확보대책 마련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플라스틱 어상자 예산 확대 또는 현장 적용 방안 검토 필요 ○ 긴급방류 지침 이행 관리 필요 ○ 긴급방류 기준에 중간어 단가 신설 필요 ○ 서해 NLL 불법조업 관련 중국과 협력 필요 ○ 추자도 해역 타지역 어선 불법조업 근절 방안 마련 필요 ○ 서해5도 어장확장 및 야간 조업시간 연장 필요 ○ 낚시어선 TAC 도입 및 낚시법 금지행위 단속 강화 필요 ○ 낚시로 인한 어획량 감소 대책 마련 필요 ○ 전복 가격 하락 대책 및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전남해 미조항 방파제 건설 추진 필요
해 운	○ 과거 북극항로 운항 실패 요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극복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북극항로 시범운항 필요 ○ 북극항로 개척 관련 범정부 협력체 등 추진체계 마련 필요 ○ 북극항로의 이점과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 북극항로의 환경성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EU 녹색해운항로 구축 필요 ○ 포항항에 북극해운정보센터 설치 방안 검토 필요 ○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수리·정비 등으로 여객선 미운항 시 대체선 투입 의무화 대책 마련 필요 ○ 연안여객선 미운항 시 대책 마련 필요 ○ 2025년 12월 울릉도 항로 미운영과 관련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연안해운 여객 공영제 도입 추진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여객선 요금제 할인제도 개편방안 검토 필요 ○ 내항여객선 안전을 위한 선원 안전·보건 국가 지원 필요 ○ 내항선원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소득 비과세를 외항선원 수준으로 확대 필요 ○ 내항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등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ILO 어선원 노동협약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선원노동위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도입 필요 ○ 해운선사 간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의견 조율 필요 ○ 연안화물선사와 화주 간 상생 대책 마련 필요 ○ 쿠팡의 연륙도서민 추가 배송비 부과에 대한 조사 및 환수 조치 필요 ○ 연륙섬 주민에게 부과되는 추가 택배비 문제 개선 필요 ○ 평택항 전기차 화재 및 화학 사고 대응 대책 마련 필요 ○ 항만별 맞춤형 항만 재해정보 통계 구축 필요 ○ 해운항만 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복구 점검 절차 개선 필요 ○ 항만 보안업무 일원화 로드맵 마련 필요 ○ 제주항 항만 보안 방안 마련 필요 ○ 부산항 신항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군산항 준설 예산 확대 필요 ○ 부산 감천항 기존 수리조선소 폐지 및 신규 단지 조성을 위한 실행가능한 방안 마련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IMO 넷제로 전략 준수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 마련 필요 ○ 국가필수선박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항만공사에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 필요 ○ 항만공사의 인구 감소 지역 일자리 창출 노력 필요 ○ 새만금항만공사 설립 검토 필요 ○ 연안 자율운항선박(K-CASS)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인력양성 계획 마련 필요 ○ 여수항만 D-1 정박지 해상환적 재개 검토 필요
해 사	○ 우리나라 친환경 선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대책 수립 필요 ○ 매년 발생하는 선박화재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필요 ○ 바다내비 센터 이전지가 부산 임시청사와 떨어져 있어 이전 시 문제가 발생 않도록 추진 필요 ○ 국제운송규정 강화로 슷 수입 차질이 우려되는바 관계부처 사전공유 필요 ○ 이용자가 저조한 국립등대박물관 전시 안내 앱 개선 필요
항 만	○ 화종별·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거점항만 육성 필요 ○ 북극항로 개척 관련 항만별 기능분담 필요 ○ 국익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항만재건 지원 재검토 필요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다대부두 포함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항만기본계획이 특정 정치인의 치적 쌓기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업 검토의 원칙과 중립성을 철저히 견지 필요 ○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서울항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행정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 필요 ○ 지방관리 항만의 국가로의 전환 방안 마련 필요 ○ 북극항로 개척 관련 제주항의 크루즈 육성 및 거점항만 육성 연구용역 시 관련 사항 포함 필요 ○ 새만금신항을 푸드허브항·수소전용·콜드체인 항만으로 육성하고 배후부지 재정전환 및 선석 증설 추진 필요 ○ 2023년 발표한 자동화항만 국산화 비율 목표치 달성 및 5G 통신망 장비·기술 국산화 필요 ○ 여수광양항에 AI 스마트항만 조성 필요 ○ 항만 안전사고 연구용역 실시 등 대책 마련 필요 ○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해양수산부 장관 보고 의무화를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등 개정 필요 ○ 항만에 특화된 재해통계 집계 대책 마련 필요 ○ 연안침식 관련 국가 역할 강화 필요 ○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해수부 자체 감사 필요 ○ 항만운영협약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부산항 환적 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등 물류비 절감 노력 필요 ○ 평택·당진항 국도38호선 및 포승~평택 철도 조기 추진 필요 ○ 여수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항로 증심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감천항 친수공간 조성 계획 마련 필요
기 타	○ 본부 초과현원 및 소속기관 결원 발생에 대응한 인력 재배치 필요 ○ 부산 이전 추진 과정에서 인력 이탈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할 필요 ○ 공공기관 기관장 및 상임이사 인사를 조속히 완료할 필요 ○ 여성 고위공무원 양성을 위한 체계적 인사관리 필요 ○ 산하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민간투자개발사로 재취업한 퇴직공무원 문제 해소 필요 ○ 서해어업공무원 해양수산부장(葬) 거행 관련 재조사 필요 ○ 온나라 해킹사고 관련 보안대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 이중화, DR 구축 등 데이터 안전망 구축에 만전 필요 ○ 산하 공공기관 인사기록카드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필요 ○ 해수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세월호 증거 물품 매각 등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 강화 필요 ○ 조선해양플랜트 기능 이관에 대한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 마련 필요 ○ 제6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필요 ○ 해운물류 분야 IoT 장비 보급 및 활용 지원사업 재개 검토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외국인 어선원 고용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해기사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해기사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기양성된 해기사의 북극항로 실전경험을 쌓기 위한 교류·협력 확대 필요 ○ 수산업경영자금 대출조건 변경사항의 소급 적용 필요 ○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행위 근절 필요 ○ 지방예선운영협의회 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25. 해양경찰청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해양주권수호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조직적 가담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 ○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출장보고서 누락, 방첩사 업무협약의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 ○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우리 관할 해역을 집단적으로 불법 침범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징수한 담보금이 피해를 입은 국내 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등과 관련하여 잠정조치수역 내 경비구역을 확대하고, 대형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필요 ○ 한반도 주변 광역 해역에 대한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무인 감시체계를 포함한 미래형 해양경비체계(MDA)를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 ○ 조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소형 경비함정의 근무 여건 개선 필요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에 대비하여 해상 테러 등 위협에 대한 해상 경호 및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할 필요 ○ 무인기 도입 시 실제 비행 성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용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해양경찰청 초계기는 2012년 이후 추가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항공대(김포·무안)에만 배치되어 있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규 도입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원거리 해역에서의 장시간 수색·구조 임무 수행을 고려한 대형헬기 도입 검토 필요 ○ 대형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신안 해역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라 목포광역시VTS와 전남 해상풍력단지 간 레이더 연계 문제에 대한 안전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개정된 사례가 확인된 바, 위임입법 한계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해양범죄단속	○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및 범죄 증가에 따른 전담 인력 증원, 마약류 탐지장비 보급, 국제공조 확대 등을 통해 수사력 강화 필요 ○ 밀입국 등 국경범죄 관련 해상경계 강화를 위한 경비함정 추가 배치, 무인 항공기 도입 및 유관기관 공조 체계 확대 필요 ○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권-기소권 분리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수사인력 양성, 수사연구소 직제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해양경찰 수사권 범위 명확화 필요 ○ 경찰에서 기소 송치 후 재판에서 무죄가 된 사건에 대한 분석·평가 시스템 등 제도 보완 필요 ○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발표 반복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고발 필요 ○ 가거도항 방파제 공사 관련 불법 의혹 및 해양경찰청 수사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동 사건과 관련한 은폐 의혹 규명할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해양구조안전	○ 영흥도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파출소 근무수칙 미준수, 상황보고 지연, 초기 대응 부실, 구조장비 미지참 등 대응체계상의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해루질 안전관리 관리를 위한 드론 운영, 갯벌 출입 통제 구역 지정 및 야간 해루질 금지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사고 위험성이 높은 테트라포드에 출입통제 구역 지정 및 순찰 강화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필요 ○ 연안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및 사업 효율성 제고할 필요 ○ 음주운항 등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 필요 ○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증가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수상·수중레저 안전관리 일원화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점검 필요 ○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 ○ 해양재난 현장 수색구조 현장 대응력 강화 필요
장비기술	○ 내구연한 경과한 5천톤급 삼봉호(제2독도함) 대체건조 필요 ○ 전자충격기 등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검사 미흡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산업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비함정 안전모 개선 대책 필요 ○ 서부정비창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부산정비창 시설 개선 및 관사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여부 점검 필요 ○ 연구센터 R&D사업 효율적인 추진 및 3D 프린팅 관리 체계 개선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오염방제	○ 해양오염관련 변상금 미수납 대책 마련 필요 ○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측정 간이분석장비의 주기적인 검 · 교정 필요
조직운영	○ 파출소 근무 규정 위반 · 성 범죄 등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쇄신방안 마련 필요 ○ 청렴 체감도 향상을 위한 내부 청렴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및 소송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계 대상자도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징계 기준 마련 필요 ○ 평택 대산항 경찰관 공사사고 관련 전면 재조사 및 감사원 감사 필요 ○ 함정스피커 등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관행 개선 필요 ○ 해양경찰병원 설립,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확보 필요 ○ 함정 등 현장과 소통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직장협의회 가입 기준 확대 등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국제적 해양경찰 임무특성을 고려, 조직의 업무범위 등 검토 필요 ○ 고흥 및 제주동부 해양경찰서 신설 필요 ○ 재직기간 5년 이하 경찰관 의원면직 증가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 ○ 함정 · 파출소 등 지방관서 현장 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여성 경찰관 고위직 비율 확대 필요 ○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무와 직무 중심으로 교육훈련 전면 재검토 필요 ○ 구조 인력 확충과 전문 교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인재개발원 설립 필요성 검토 필요 ○ 해양경찰청의 업무 범위 근거가 불분명한 수산업협동조합 선거 수사는 중단하고, 해당 인력을 급증하는 해양 마약 범죄 대응에 배치하여 수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

26. 부산항만공사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부채 비율 높은 수준, 철저한 관리 필요 ○ 미납채권 회수 대책 마련 필요 ○ 사이버보안 인력·예산 확보, 항만공사 간 협의체 구성 필요 ○ 관리자산 규모 대비 인력 부족 문제 해결 필요 ○ 안전관리 인력·예산 부족 문제 해결 필요 ○ 영업이익 고려하여 사회공헌 예산 증액 필요 ○ 대규모 투자사업 사업관리·심사 강화, 재무위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 북극항로 전략 수립 시 정부의 멀티포트 전략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 ○ 부산항보안공사 사장 선임 시 특정 기관 출신 편중 문제 개선 필요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여부 점검 필요 ○ 경영혁신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 필요
항만운영	○ 감천항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간 부족 문제 개선 필요 ○ 부산항 클러스터 사업 부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친환경 연료 병커링 인프라 구축계획, 사업화 계획 수립 필요 ○ 영도 크루즈 터미널 활성화 대책 강구 필요 ○ 청학안벽 활용 용도 정리 필요 ○ 신항 7부두 물동량 확대, 대기 시간 감소 방안 마련 필요 ○ 신항 터미널 과다 심각, 대책 마련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제주-부산 크루즈 활성화 공동협력 및 제주-부산 연안화물 노선 추가 방안 마련 필요 ○ 항만공사 간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 협력 필요 ○ 항만공사 보안업무 청경 일원화 필요 ○ 불법 전대, 임대 관리 부실 문제 점검 필요 ○ 장기 방치 선박 문제 해소 필요 ○ 드론 비행 금지 구역 확대 필요 ○ 드론 테러 대비 체계 신속 구축 필요 ○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 처우개선 필요 ○ AMP 이용률 제고 방안 필요 ○ 신항 질적 경쟁력 부재 문제 해소 필요 ○ 동북아 허브 경쟁력 확보 위한 차별화 전략 필요 ○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신기술 연구개발 필요
해외사업	○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 필요 ○ 해외사업 인력관리 비용 총인건비 제외 기재부에 요청 필요
재개발	○ 북항 재개발 공공성 훼손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

27. 인천항만공사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미납채권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사이버보안 인력·예산 확보, 항만공사 간 협의체 구성 필요 ○ 안전관리 인력·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 ○ 공사 부채 비율 현황 점검 필요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여부 점검 필요
항만운영	○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항만배후단지 임대 기간 형평성 있는 연장 필요 ○ 친환경 연료 병커링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필요 ○ 인천-제주 항로 재개를 위한 지원방안 및 계획 수립 필요 ○ 골든하버 부지매각 계획 및 근린공원 미개방 관련 개선방안 수립 필요 ○ 항만 보안업무 청경 일원화 필요 ○ 드론 비행 금지 구역 확대 필요 ○ 드론 테러 대비 체계 신속 구축 필요 ○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 계약 해지로 중고차 수출 활성화 위한 대안 마련 필요

28. 여수광양항만공사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공사 부채 비율 현황 점검 필요 ○ 공사 미납채권 관리 필요 ○ 사이버보안 인력·예산 확보, 항만공사 간 협의체 구성 필요 ○ 수익계약 증가에 대한 적정성 점검 필요 ○ 항만 안전관리 철저 필요 ○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대한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있는 마스터플랜 추진 필요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필요 ○ 공석인 신임 사장의 조속한 인선 필요 ○ 정보시스템 DR 구축 필요 ○ 크루즈 특경 위·수탁 계약 관련 징계 감경 타당성 검토, 재발 방지 필요
항만운영	○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율, 수익률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여부 점검 필요 ○ 드론 테러 대비 체계 신속 구축 필요 ○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적극 구축 필요

29. 울산항만공사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인사평가 오류 재발 방지 위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사이버보안 협의체 구성 등 사이버보안 인력 및 예산 확충 필요 ○ 영업이익 고려하여 사회공헌 예산 증액 필요 ○ 미납채권 회수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안전관리 인력·예산 부족 문제 해결 필요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필요
항만운영	○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이용률 제고 위한 노력 필요 ○ 유관기관과의 협의 통해 토양오염 정화 조치 조속히 이행 필요 ○ 항만 보안업무 일원화 사업 조속히 완료 필요 ○ 드론 테러 대비 체계 신속 구축 필요 ○ 친환경 연료 병커링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필요 ○ 항만 게이트 전동화 가능성 검토 필요 ○ 항만 간 중복 투자 문제 대책 마련 필요 ○ 불법 전대, 임대 관리 부실 문제 점검 필요

30. 해양환경공단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노력 필요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여부 점검 필요
해양보전	○ 해파리 폴립 제거 잠수인력 양성 및 해상풍력 관련 해파리 폴립 서식지 증가 예방에 대한 노력 필요 ○ 만·관학이 함께 폐어구 재활용 기술 개발 노력 필요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수거 목표 달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 노력 필요 ○ 중앙부처의 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남강댐 방류로 사천만 등 남해안에 해양쓰레기가 유입되어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협조 필요 ○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노후선박 교체, 공공 집하장 설치 등 관계부처와 해양쓰레기 저감 정책 노력 필요 ○ 해양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관련, 해양환경측정망 수준의 전문인력, 예산(분석장비)을 적극 확보 필요
해양방제	○ 위치미상 및 고위험 침몰 선박 잔존유 제거·관리 노력 필요 ○ 대형 해양재난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국영 구난 전문기관 신설 등 관계부처와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다목적 대형 방제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비 관리 필요 ○ 공단이 보유한 유희수기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통하여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 필요

3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 점검 필요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필요
주요 사업	○ 폐어구 재활용 체계와 기술개발 연구 추진 필요 ○ 해양수산 R&D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보안 관리강화 노력 필요

32. 한국수산자원공단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수급업체 포함,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및 교육 강화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필요 ○ 정보보안 취약점 관리 방안 및 전담인력 충원 계획 마련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으로 부담금을 납부한 바, 장애가 직업 선택에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고용 노력 필요
주요 사업	○ 수산종자방류사업의 품종별 효과 차이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경제성이 높은 품종 확대 및 방류 품종 편중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사천·남해권을 포함한 광역단위 자원 회복 체계 구축 및 국가 차원의 집중 관리 필요 ○ 바다숲 조성사업 효과를 재검토하고 바다사막화에 따른 피해 분석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대책 강구 필요 ○ 국제기구의 의무승선률 확대 기조에 맞춰 옵서버 인력 확대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 보고 필요 ○ 수산분야 전문가 파견 ODA 사업 필요성 검토 필요 ○ 어촌소멸 및 고령화 극복을 위해 어선청년임대사업 홍보 강화, 예산 확대 및 지원 기간 연장 필요 ○ 어선청년임대사업의 임대인(노령어업인)과 임차인(청년어업인)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공단 제주본부 시설물 노후화 해소 및 기후변화 대응 품종 생산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기후생명자원센터 설립안 마련 노력 필요 ○ 어부가 판다 플랫폼 운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 및 담당자 조치 계획 마련 필요

3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해양교통 안전	○ 하이브리드 선박의 체계적 검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한강버스의 전기계통, 방향타 등의 고장원인 파악 필요 ○ 선박 시운전 검사 시 운행의 적합성 여부까지 판단 필요 ○ 내수면선박 구명·소방 설비배치 도면 승인 관련 제도보완 필요 ○ 여객선 선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추진안 마련 필요 ○ 부유물 감검사고 저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 필요 ○ 매년 증가 중인 어선 해양사고 대책 필요 ○ 미수검 선박 관리를 위해 연락불가 어선의 관리체계를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공단의 수지차 보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선검사 수수료 등 어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3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정보보안 취약점 관리방안 및 전담인력 충원 계획 마련 필요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 상향을 위한 종합대책 강구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으로 부담금을 납부한 바, 장애가 직업 선택에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고용 노력 필요
주요 사업	○ 관내 훈련장 부재로 법정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부권 선원들의 교육훈련 적기 이수를 위해 경인권 선원 종합비상훈련장 유치를 위한 연수원의 역할 필요 ○ 해기사 시험 문제의 적정성 및 관리 실태에 대해 상시적·지속적인 점검 필요

35. 한국해양진흥공사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필요 ○ 데이터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해복구시스템(DR) 마련 필요
주요 사업	○ HMM 매각 방향 및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해운업계의 우려를 청취하여 신중하게 추진 필요 ○ 내항선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 확대 필요 ○ 북극항로 개척에 있어 해양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필요한 금융지원 주도적 추진 필요 ○ 중소선사에 적극적인 투자 필요

3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연구개발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하여 해양과학기술을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미세플라스틱과 해양쓰레기 관련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진단과 대응 연구를 추진할 필요 ○ 심해저 자원은 정부 주도의 준비와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정부-민간 협력 전담기구 설치 필요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 2022년 발생한 연구소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보완대책 및 사이버보안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37. 한국어촌어항공단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수급업체 포함,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및 교육 강화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필요 ○ 정보보안 취약점 관리 방안 및 전담인력 충원 계획 마련 필요 ○ 낮은 보수 및 취약한 복리후생 수준 등으로 인해 매년 직원들의 퇴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사업 수행이 필요
주요 사업	○ 부산 이전 관련, 직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 ○ 어촌어항공단 등 수산업 관련 기관의 본사 소재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 필요 ○ 어촌뉴딜사업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어촌·어항 특화 정책으로 확대하여 전담기관화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 필요 ○ 어촌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추진 필요 ○ 부산 지역의 어촌·어항 개발 및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및 시행할 필요 ○ 수산자원을 활용한 어촌 기업과의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모색 필요 ○ 청년귀어인 대상 양식장 임대료 지원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적극 지원 필요 ○ 어촌정착상담사 운영 예산을 확대하고, 컨설팅 형태에 따라 상담비를 차등화하며, 더 많은 귀어귀촌인 및 어업인이 상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 ○ 해양쓰레기 수거·관리 대응을 강화하고 어항관리선 배치 등 관리체계를 점검·개선할 필요

38.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노력 필요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필요 ○ 장애인 전용 서비스 제공률 개선 필요 ○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주요 사업	○ 해양바이오뱅크 자원이 실제 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39. 국립해양박물관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연평균 80만명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 인력 추가 확보 필요 ○ 정보보안 취약점 관리 방안 및 전담인력 충원 계획 마련 필요 ○ 박물관을 방문하는 장애인에 대한 관람 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지난 5년간 혁신제품 구매실적 미흡하여 개선 필요 ○ 창의적인 민간기업의 역량 발휘를 취지로 하는 민간 투자 목적에 맞는 운영 필요

40.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청렴도 제고 및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 점검 필요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필요
관람전시	○ 장애인 전시 관람 지원 확대 필요 ○ 지역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의 연계 통한 해양과학교육의 활성화 필요

41.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필요 ○ 국립등대박물관과 부표사업소의 인력 정상화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 점검 필요 ○ 정보보안 전담인력 충원 계획 마련 필요 ○ 조속한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필요
주요 사업	○ 캄보디아 ODA 사업의 계획에 맞는 이행 필요

42. 한국해양조사협회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장애인 의무고용을 조속히 이행할 필요
주요 사업	○ 영해기준점 시설 훼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관리자 안전 대책 필요
정보보안	○ 정보보안 전담인력 증원 및 예산편성의 일관성 필요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필요

4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조직관리	○ 도이치모터스 그룹 대출 관련 감사 필요 ○ 진해수협과 고성수협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대출 업무에 대한 감사 필요 ○ 여수수협 임금 체불 관련 감사 필요 ○ 회원조합 횡령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 준법감시 인력 활용 등 대책 마련 필요 ○ 조합원 1인당 출자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배당금액은 감소하고 있어 과도한 부동산 대출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등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중앙회장 선출 관련 조합원 직선제 도입 검토 필요 ○ 수협중앙회 본사의 전남 이전 검토 필요 ○ 비상임이사 연구활동비 지급 관련 근거 마련 필요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2022년부터 5등급 중 3등급 유지) 상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 ○ 사이버 보안 관련 협의체 마련 필요 ○ 전기차 화재 관련 시스템 정비 및 사고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으로 부담금을 납부한 바, 장애가 직업 선택에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고용 노력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금융	○ 도이치모터스 그룹, 사랑제일교회, 우진메디컬프라자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 및 책임 있는 조치 필요 ○ 대출 관련 사전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일반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 필요 ○ 상호금융 공동대출 심사 강화 대책 마련 필요 ○ 단위수협 고위험(브릿지론) 대출 관리 강화 필요 ○ 무궁화신탁 등 부동산 신탁 공동대출의 대규모 부실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상호금융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 관리를 위한 건전성 회복 목표치와 추진 계획 마련 필요 ○ 비어업인 대출 연체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부실채권 매각 자회사(수협엔피엘대부)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양식재해보험의 낮은 지급률 등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지급 불가 내역에 대한 통계 관리 및 사후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 ○ 양식재해보험 조기 가입 유도 및 보험료 납입 등을 위한 가상계좌제도 신설 필요 ○ 양식재해보험 할증 방식 문제, 특약(약관) 문제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소음성난청 어선원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엄격한 지급 기준에 대한 보완 필요 ○ 해녀학교 교육기간 중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방안 마련 필요 ○ 바지락 관련 보험 상품 개발 추진 필요 ○ 섬주민을 위한 자동차 보험 신설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등 예방조치 강화 필요
지도사업	○ 발전소 건설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 손실액 현실화 필요 ○ 해상풍력 사업 관련 어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 ○ 낚시 활동 관련 기준 및 어업인 피해에 대해 대책 마련 필요 ○ TAC 제도의 형평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운영상 개선책 마련 필요 ○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사업에 대해 적극 참여 필요 ○ 어선 감척 확대를 위해 노력 필요 ○ EU의 뱀장어 양식 CITES 부속서Ⅲ 등재 요청에 대해 등재 저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투트랙 대응이 필요 ○ 김 양식 관련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환경 실태를 점검 및 불법 노동에 대한 지도·관리 강화 필요 ○ 일반선원, 외국인선원 대상 어선원 안전교육 확대 필요 ○ 구명조끼 지원사업 내수면 어업까지 확대 필요 ○ 구명조끼 지원사업의 행정절차 지연에 대해 선지원 후정산 등 현장 혼란 문제 대응 필요 ○ 내수면 어업에 대한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대상 확대 필요 ○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입 모델 다각화, 친환경 인증 및 모니터링 등 품질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자본잠식 회원조합 구제 등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회원조합 임금체불 실태 전수조사 필요 ○ 수산업의 AI 전환 관련 수협의 적극적 역할 필요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여 및 지원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제사업	○ 경제사업 적자,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수협유통(바다마트) 적자 관련 구조개혁 등 사업성 제고 방안 마련 및 철저한 위생관리 필요 ○ 수협유통 기계장치, 작업환경에 대해 전수조사 필요 ○ 수협 오리온 합작법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김 양식업자와 가공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 개발 노력 필요 ○ 마른김의 조미김 전환 가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 계획 마련 필요 ○ 수협사료 공장의 전남 신축 추진 필요 ○ 다수의 위판장에서 방조·방서시설 및 위생시설 설치가 미비한 바, 단계적 시설투자 지원 확대 필요 ○ 산지위판장과 폐어처리시설 등에 대해 농사용 전기요금 혜택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수산물 냉동창고 프레온가스 냉매 감축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학교급식 수산물 선호도 저하 관련 교육부·한식진흥원 및 영양사협회 등과 협업 등 대책 마련 필요 ○ 군급식 수산물 물량 감소에 대해 국방부와 협업 등 개선책 마련 필요 ○ 국방부와의 급식단가 협의 시 수산물 급식비를 물가 및 인건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수협은행】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금 융	○ 도이치모터스 그룹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 및 감사 필요 ○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신용대출의 적정성 관련 여신심사 판단 책임 소재 및 신용평가 기준의 적정성 점검 필요 ○ 신용대출 심사 및 회의록 작성기준 강화 필요 ○ 8년만에 공시된 금융사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철저한 영업점 관리 필요 ○ 대출 연체율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비어업인 대출 연체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무수익여신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자산 대비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는 등 경영 혁신 노력 필요 ○ 수기업무 전산화를 통한 업무 개선 필요 ○ 귀어정책(창업)자금 대출 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제도의 순기능을 확대하는 정책 전환 필요 ○ 사이버 보안 관련 협의체 마련 필요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등 예방조치 강화 필요 ○ 음주운전 관련 인사 규정 강화 필요 ○ 노사관계 개선과 콜센터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교섭 등 노란봉투법 시행 대응 필요 ○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 필요 ○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 관련, 재정건전성 고려 시 회사 인수를 통한 자회사 편입이나 계열사 신설 자체 필요

44. 한국선급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선박검사 관련 징계 건 증가와 검사 미흡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외국 선급 현황 파악 통한 영업 전략 수립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노력 필요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여부 점검 필요
해양환경	○ IMO 탄소세 도입 유예를 조선·해운업계의 발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Ⅲ.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 홍보 영상 제작 시 문화적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과 공무원 간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 공무원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 직원의 비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을 관리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 전반에 대해 서버 이중화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여부를 점검하는 등 물리적 재난에 대비한 정보보호를 강화할 것
- 예비비 집행 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거칠 것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직자 갑질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FTA 수입 물량의 구조적 통제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농산물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노력할 것
- CPTPP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업계와의 상시 소통·협의 체계를 내실화하여 농정 신뢰를 제고할 것
- 한미 통상 현안 대응 시 대두·쌀 등 핵심 농산물의 추가 개방을 배제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입장을 대내외에 명확히 표명하고 정책 신뢰를 확보할 것
- LMO 감자 수입에 따른 식품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유해성 및 환경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중에 유통된 LMO 목화씨에 대해 전수조사를 포함한 실효적 안전 관리 대책 및 확산 방지 방안을 강구할 것
- 우리 국민 대상 범죄 수사 협조가 미흡한 캄보디아에 대해 농업 ODA 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적인 상응 조치를 검토할 것
- 비상시 식량안보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진출국을 다변화하고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
- 해외 개발 농업자원의 국내 도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반입 경로 확보 및 유통망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공항만 외래병해충 분포조사의 체계적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정규 전담 인력을 조속히 확보할 것
-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농어촌빈집은행 활성화, 농어촌 빈집관리 시스템 체계화 및 빈집 정비 예산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제도화 과정에서 최초 제안자의 혁신 리스크를 보전하기 위한 전용 지원 기금 또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검토할 것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이 미수립된 문제를 시정할 것
- 여성농업인 출산·육아 수당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과 관련한 부처의견을 재검토할 것
-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요건을 재검토할 것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배제 문제를 해소할 것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지역 균형성장 및 농촌소멸 대응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것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적정성 검토가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을 재검토할 것
- 농산업의 전후방산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략적 육성 대책을 마련할 것
- 농어촌 통신,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금융과 관련하여 농어민이 소외되는 문제를 해소할 것
- 농어촌민박과 관련한 대형 숙박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와 관련하여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진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저조한 사유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의 연령 상한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수검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이동검진버스의 운영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독려할 것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하여 관련 부처와 협력할 것
- 농촌지역의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할 것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정·편법 실태를 조사하고

실제 경작이나 생산활동 여부를 기초로 농업경영체를 관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을 식별하는 기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할 것
- 농업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내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 마련 및 법·제도를 개선하여 농작업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질 것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여성농업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농업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농업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
- 공동영농모델의 확산을 위해 사업 규모와 예산을 확대하고 초기 참여 요건 완화를 검토하며, 지역 농업을 이끌 수 있는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
- 공동영농법인이 농지 집적화를 목적으로 농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은행의 임대농지를 청년농보다 해당 법인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농업대체복무제도 운영에 있어 농지·어장 보유 중심의 선발 기준을 개선하고, 청년 대상 별도 트랙 신설, 잠재력·영농계획·비전 등을 중시하는 선발 방식으로의 제도 개편을 검토할 것
- 농촌 지역의 유학생 불법 취업 알선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등 농촌 인력공급체계를 합법적·안정적으로 정비할 것

- 농업진흥지역 내 방치된 유아시설, 노인시설 등에 대해 조사하여 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농촌 공동생활 편의시설의 이용 대상을 전체 마을 주민으로 확대할 것
- 현장 수요가 많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계절근로자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현장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며, 지역별 운영방식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것
-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추가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농협이 소유한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자 공동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보조금의 사용을 항목별로 구분하기보다 현장 여건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농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 FTA 피해보전직불 제도운영을 10년 연장하고 지급요건 완화와 단가 인상을 검토할 것
- 농지 보전 계획, 중장기 농지 확보 방안 등 식량안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 농지 관리 및 농지 교환·합병을 통한 농지 규모화를 위해 농지관리기구 도입을 검토할 것
- 농촌지역 인구 감소 대응, 경지이용률 제고, 농지소유자의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 외국인의 농지 이용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적별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 농지관리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사업 지속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농업재해보험이 농협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재해보험을 장기적으로 축소·개편하고, 위탁기관 수익의 일정 비율을 농업재해대책기금으로 환원해 재해 복구와 영세농 보상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
- 감귤·만감류 재해보험 보상기준을 개선할 것
- 쪽파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확대하고 쪽파 병충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
- 특용작물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
- 가을장마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 및 보상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벼 깨씨무늬병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깨씨무늬병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과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
-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기준이 되는 수확량 산정 시 농업재해로 인정된 피해 연도는 수확량 산정에서 제외하고 수확량뿐 아니라 품질 저하로 인한 가격 하락 피해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뽕은감 등 과수작물 낙과피해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인정과 관련한 현장 보존 및 피해 산정 기준과 개인별 보험료율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것
- 임목 관련 보험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임산물 중 보험 미적용 품목에 대한 현황을 조사할 것

- 가축재해보험 대상으로 저병원성AI 보장 상품 개발을 검토할 것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을 모든 화훼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농가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고 농가 부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것
-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전망이 되도록 농작물재해보험, 가격안정제 등의 정책과 연동하여 추진할 것
-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
- 재해복구 지원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부담이 농가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부담 비율 폐지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농진청이 운영 중인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진청과 협력하여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재난안전시스템(NDMS)의 피해 입력 항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준항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업 분야 정책보험, 투자, 정책자금 검사 등에서 전문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정책자금 검사와 관련하여 단기자금 등 검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검사인력을 확충할 것
- 서울중앙농협 조합장 골드바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
- 산청군농협 조합장의 겸업금지 위반 등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

역조합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도시조합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
-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에 따른 농가소득 파악 시 공익직불금을 농업소득에 포함할 것
- 후계농·귀농자금을 이용하는 2018년·2019년 청년농 대상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차보전률 인상 등을 검토할 것
- 청년농 지원사업의 정책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청년농 지원을 위한 원스탑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기준 완화, 지원금 단가 인상 및 지원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고, 청년 농촌보급자리사업 수행 시에도 입주 조건 완화, 임대기간 연장, 생활권 접근성 등을 고려한 부지 선정 기준 개선 등을 검토할 것
- 농업법인의 투기 근절을 위하여 부처 간 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검토 시 농업인 노후소득을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
- 화훼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차액지원, 차등 인상 등을 검토할 것
- 종자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협의할 것
- 농어촌공사 임대수탁 농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 실태를 점검하고, 원상복구 비용 등 소유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감귤 재배 이후 선과·포장 과정에서의 인력부족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재배 이후 단계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대한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와 협의할 것
- 부모 소유 농지에서 청년창업농이 영농을 하는 경우 정착지원금과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친환경공익직불과 관련한 점검·단속 과정에서 실경작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 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해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산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할 것
- 액비 운송 및 살포차량에 농업용 면세유 적용을 검토할 것
- 품목조합 설립 기준 현실화를 검토하고, 신생 품목조합의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 관리비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것
- 농지은행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사업을 국회 보고 및 동의 없이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농 지원이라는 당초 사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미래 농업 AI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선제적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실행 전략을 고도화하는 등 면밀한 사전대책을 마련할 것
- AX 플랫폼 사업의 농업 현장 확산을 위한 선도 모델을 구체화하고 수혜 범위를 다각화하는 등 사업 구조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농업·농촌 미래전략 및 스마트농업 확산에 따른 양극화를 방지하고 중소·청년농 대상의 포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 청년의 농업 유입 촉진 및 농업 AX 선도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과정을 다각화할 것
- 첨단 농기계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의무구매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무기질 비료 지원 사업의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 상토 가격 안정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메틸브로마이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약관리법」상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 제주 흑우의 품질 고도화와 연구 성과의 현장 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예산의 증액을 위해 노력할 것
- 국정과제 이행의 가속화를 위해 AI·첨단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와 지역균형발전 R&D 예산의 증액을 위해 노력할 것
- 친환경 인증농가의 비의도적인 농약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과정 중심의 인증제로 전환할 것
- 친환경인증을 부여받는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친환경농업의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임차농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조세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친환경 농가 임차농 실태를 정밀 진단하고 농지은행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농약성분 검사 추가에 따른 친환경 농가의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내 직급별 인력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승진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직의 직급별 정년 격차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의 시공업체 선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대출 시행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비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의 최대살포량 기준을 마련할 것
- 농기계 안전사고 대책으로 농기계 보조장치 보급률을 제고하고, 안전 교육을 확대할 것
-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사후 관리 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파편적인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푸드테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전환을 추진할 것
- 공공배달앱 지원대책과 배달플랫폼 공정화 정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을 마련할 것
- 할인쿠폰 지급 외에 공공배달앱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식자재유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방향 및 계획을 제시할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식품·민감품목 식품공전 분류 개정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 육성 주무부처로서 필요한 대응을 할 것
- 화훼 수출 시 훈증 처리비 지원 등 수출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 K-푸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신선식품 및 농기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출실적 중심의 K-푸드 정책 추진으로 농산물 무역적자 확대 및 수입 개방에 따른 피해 농어민 보호가 소홀해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것
-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전국 식품산업 진흥 역할을 확대하고, 증원 등 인력·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며, 입주기업의 근로여건을 확충할 것
- 수의직 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 등 가축방역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방역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현장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기관장 상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련 남북협력 방안을 검토할 것
-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살처분 및 재해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살처분 동원 인력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과 치료비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유기동물 구조·보호 예산 및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대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반려동물 안전용품 품질인증 및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할 것
- 영농형 태양광 사업 관련 농민 간 이견, 농촌 난개발, 농작물 생산량 감소,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관련 전남, 전북 등 일부 지역이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 및 기존 전력계통 연계 신청자 과밀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개 식용 종식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
- 신종펫숍 문제, 유기동물 보호·관리 정책의 실효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려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규제 완화를 재고할 것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시행에 따른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동물용 의약품 불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 제재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
- 가축전염병 백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산지쌀값과 소비자쌀값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쌀 유통구조를 마련할 것
- 식량자급 목표를 재정립하고, 식량안보의 정의 및 지표를 마련하여 식량안보정책체계를 확립할 것

-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사업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
-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활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계획을 수립할 것
- 최근 발생한 쌀값 급등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쌀 수급관리 및 유통대책을 강구할 것
-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수확기 쌀 시장격리량을 설정할 것
- 피해 벼의 수확 직후 매입 및 매입가격 현실화를 검토할 것
- 깨씨무늬병 피해 벼를 전량 구매하고 적정한 매입단가를 설정할 것
- 수탈아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 벼를 충분히 매입할 것
- 주정용, 가공용 쌀 할인 판매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 및 시장 불안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쌀가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가공용 쌀 원료곡의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
- 충남권 내 가공용 쌀 생산단지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 간척지 내 가공용 쌀 재배 시 전략작물 인정을 검토할 것
- 전략작물직불제 운영 시 알팔파의 하계조사료 인정을 검토할 것
- 수출용 즉석밥에 미국산 쌀이 아닌 국산 쌀을 사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가루쌀, 콩, 밀 등 전략작물 재배 유도 시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역·작기별 감축면적 상한 설정 및 비상시 완충장치 등 정교한 제도 설계를 통하여 전략작물 육성 및 쌀값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것
- 국가데이터처 양곡소비량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콩 재해 예방을 위해 녹비작물 또는 동계작물과의 이모작을 검토할 것
- 논콩 수매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과잉생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콩 수매예산 추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수입콩 할인 판매에 따른 국산콩 가격경쟁력 문제를 해결하고 대두 수입량 확대를 자제할 것
- 신동진벼의 보급종 공급 중단을 재검토하여 전북 대표 브랜드를 유지할 것
-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 배송사업 참여 포기로 이어지는 영업용 차량 번호판 부착 의무에 대하여 유관 부처와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 쌀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하여 정확한 RPC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 방식을 개선할 것
- RPC 운영을 효율화하고 RPC 수익의 농가 환원 방안을 마련할 것
- 통합RPC만을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으로 하는 현행 사업구조를 개선할 것
- 가루쌀 정책의 유지 여부 및 규모에 대하여 조속히 점검할 것
- 가루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분비, 인건비 등 생산비 지원을 검토할 것
- 체계적이지 못한 밀 소비량 조사 방식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소비확대 중심의 국산 밀 자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이양 수리시설의 개보수 및 안전관리 현황을 관리·감독할 것
- 4대강 보 개방 시 농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

-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양수장 시설개선으로 인하여 노후 양수장의 시설개선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할 것
- 농지의 규모화와 첨단 농기계 활용을 위한 농지대구획정비사업을 추진할 것
-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가 사용하는 명칭이 상이한 저수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명칭을 일원화할 것
- 국산 흑염소 산업 발전을 위해 이력제, 수입조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가을 장마에 따른 벼짚·조사료 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
- 스마트축산 확산을 위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집중적 투자 방안을 마련할 것
- 축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생산·가공·유통이 연계된 스마트축산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
- 축산물품질평가원 통상임금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한돈육성법 제정에 협력할 것
- 가축시장 온라인 거래체계 고도화를 위한 R&D 추진 방안을 강구할 것
- 「바이오가스법」 시행 관련 양돈농가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원유 및 유제품 소비확대 등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참여한 유업체가 낙·축협과의 계약물량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양돈농가 슬러지 배출 주기 단축 등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저메탄사료 보급 등 축산농가의 저탄소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사업을 개선할 것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실적을 개선하고 성과지표를 보완할 것
- 생활승마대회 지원을 확대하고 경주 퇴역마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 승용마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승마체험을 확대할 것
- 조사료 운송비 문제를 개선하고 생산 지원을 확대할 것
- 고령화, 신규진입 단절, 자급률 하락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축산업 지속가능성 유지 대책을 검토할 것
-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전 사육 농가에 대한 임신돈 군사공간 설치 및 고정틀 사육기간 제한 의무 제외 방안을 검토할 것
- 버섯 배지의 폐기물 분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버섯산업 육성법의 제정 가능성을 검토할 것
- TRQ 양과 물량 확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낙과·열과 피해를 입은 저품위 사과에 대한 수매 지원을 검토할 것
-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하여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률 문제를 개선하거나 정부·공공기관이 도매시장법인을 직접 운영하도록 할 것
-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결과의 농가소득 증대 효과에 대하여 검증할 것
-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하여 할당관세 등의 일시적 대응이 아닌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구조적인 전환을 추진할 것
- 한-에콰도르 SECA 비준에 따른 화훼산업 대책을 마련할 것
- 화훼농업 예산지원 확대 및 화훼농업의 지속가능성 점검 등 화훼농

가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온라인 유통 농축산물의 수수료 및 정산주기 등에 대한 공정한 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
- 도매시장 내 경쟁 확대를 위하여 시장도매인,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의 다양성 확대를 검토할 것
- 원산지 인증제도 폐지의 철회를 검토할 것
- 샤인머스켓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 전북 김제 지역에 비축기지 건립을 검토할 것
- 부산 학장 비축기지 이전의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 안정적인 농산물 저장·유통을 위한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을 확대할 것
- 원산지 표시 위반 군급식 납품업체에 대해 조속한 후속조치를 할 것
-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실질적인 유통구조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점검 및 개선할 것
- 청년농에게 온라인도매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매출기준을 완화할 것
- 온라인도매시장 신규 진입 시 준비 및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것
-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나타나는 이상거래에 대하여 전수조사하고 개선 조치할 것
-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하여 제주 농산물 물류비를 절감할 것
-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전통시장 예산 비중이 확대되도록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지역적 사용 편차 문제를 해결할 것
- 채소가격안정제의 예산 집행률 저조 원인을 파악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
-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농산물 유통 대란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 정부비축사업 평가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주관하고 외부 검증 및 투명한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내 말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제대회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입 위생조건」 체결국을 다변화하고 국제대회 참가·복귀말의 검역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동물용의약품 불법 수입·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감시 체계를 고도화할 것
- 메틸브로마이드 위해성 입증에 따른 검역본부의 소극적 대응을 개선하고 친환경 대체 소독기술 전환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해외 유입 가축질병 및 병해충의 원천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대국민 인식을 제고할 것
- 주요 수입절화 대상 국경검역 강화 및 소독시설 현대화, 친환경 훈증 기술 도입 등 검역시스템을 고도화할 것
- 국제 크루즈 여객 급증에 따른 검역 공백 방지를 위해 인력·장비 확충 등 차질 없는 검역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
- 식물검역 행정의 지능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구축 ISP 용역비 등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
- 농림축산검역본부 비연고 근무자 및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실효적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조류독감 유전자 검출 중국산 오리 가공육에 대한 검역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 가축전염병 백신의 신속한 개발 및 적기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체계를 구축할 것
- 농업경영체 조사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민원수당 및 위험수당을 신설할 것
-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것
- 온라인 플랫폼 단속 시 특정 플랫폼 집중단속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결할 것
- 한국농수산대학교 실습생에 대하여 실습비 현실화, 산재보험 가입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기후변화 대응의 선제적 테스트베드인 제주 내 국립종자원의 아열대 작물 전문교육 인프라 확충 등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2. 농촌진흥청

- 국산 농기계 R&D 고도화 및 보급체계 개선 등 농업기계화율 확대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수립할 것
- 연구개발 농기계의 현장 보급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
-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 및 실용화율 향상 등 보급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
- 퍼지컬 AI 기술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
- 밀원식물 확충 및 꿀벌 품종개량 등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농업 위성 활용 적시성 확보를 위한 지상 연계 R&D에 조기 착수하고 데이터 활용 로드맵을 재편할 것
-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R&D 투자 확대 등 국산밀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
- 국산 저메탄사료 연구개발을 강화할 것
- 국유특허 실용화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종자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품종 개발 및 보급 체계 고도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치유농업 및 농촌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영농부산물의 자원화 촉진 및 실효적 통합관리 이행 체계를 구축할 것
- 청년농 경쟁력 제고 및 학습단체 육성 등 미래농업 인력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예산을 복원할 것

-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가축분뇨 부숙도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것
- 품종 개량 및 방제·교육 내실화 등 기후변화 대응형 깨씨무늬병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 지역별 맞춤형 과수화상병 방제 전략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 영농환경을 조성할 것
- 대설피해 기술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농업·안전 R&D 추진을 확대하고 실효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실효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 농업인 생명 보호를 위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분해 완효성 비료 현장실증 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 등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
- 클로로탈로닐 안전성 재평가 및 안전사용 대책을 마련할 것
- 글로벌농업 인재양성 사업의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전면 재설계하고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고령농 맞춤형 스마트농업 교육을 내실화하고 디지털 농업 기술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담인력의 기술 역량 강화 교육을 내실화하고 현장 안전지도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신동진벼 공급 중단 결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재배농가 의견 수렴 및 표준 매뉴얼 수립 등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 지역 간 생산·소비 불균형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모델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

- 제주 신소득 작물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등록 농약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면적 작물 대상 PLS 운용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고령 농업인 맞춤형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입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 북한 지역 맞춤형 농업 기술 R&D 재추진을 검토할 것
- 지속적인 야생동물 피습 사고 방지 및 농업인 생명 보호를 위한 관련 R&D를 추진할 것
- PO필름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제품 품질 기준 표준화 등 실효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저탄소 농업 확산을 위한 바이오차 실증 모델을 고도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학사·사업 일정과 연계한 파견기간 최적화 등 KOPIA 연구원 중도귀국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인기관 기 수행 약효·약해시험 성적 인정을 통해 신속한 등록 체계를 구축할 것
- 농기계 검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검정 기준을 고도화하고 부실 검정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시비처방서 기준 액비 살포량의 일률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비료관리 법령을 개정할 것
- 규모화 농지의 생산성 극대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신농법 개발 및 현장 보급을 확대할 것
-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지 변동에 대응하여 권역별 특화작목 전환 전략을 수립할 것

- LMO 감자 심사위원회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것
- 국립농업과학원 등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전문연구원들의 높은 중도 퇴직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현장 맞춤형 기술 혁신을 위해 대형 첨단 농기계 사업 권한의 농촌진흥청 이관을 검토할 것
- 국내 농업환경에 최적화된 ‘한국형 농업용 드론’ R&D를 강화하고 현장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농촌진흥청 미활용 특허 비중을 축소하고 기술 이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개발 농기계의 미흡한 현장 보급 실적을 개선할 것
- 식방풍의 인지능 개선 효능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증을 가속화하고 조기 실용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할 것
- 불법 개조 농기계에 대한 인증 무효화를 검토할 것
- 농촌진흥청의 부실한 사업 관리로 인하여 실패한 서울 남부터미널 등 스마트팜 사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살인진드기(SFTS)에 의한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기피제·방충복 지원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 GMO 작물 시험 재배 시 GMO 유전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수원 잔류부서의 전북 적기 이전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현황을 정기 보고할 것

- 매년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실효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농촌진흥청 자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할 것
- 청사미화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등 공무직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상임이사 임기만료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및 상임 부원장직 확대 등 기관운영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관리자급 공무원들의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상향식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효적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 농촌진흥청 웹사이트 통합 및 모바일 앱 전환 등 운영을 효율화하고 사용자 접근성을 제고할 것
- 포장·온실관리원의 상시직 전환을 추진하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것
-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직들이 연구성과만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제도 내실화 등 인사시스템을 개선할 것

3. 산림청

- 해외파견 계약직 채용제도를 개편할 것
- 수입목재 관리 강화를 위해 「목재이용법」을 개정할 것
- 목재분야 관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
-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남북산림협력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
- 남북산림협력사업용 묘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칩덩굴 생태계 교란종 지정을 협의하고 제거 대책을 강구할 것
- 산불 진화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
- 산림보호구역 관리 체계의 문제로 피해를 입은 산양삼 재배 임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소나무재선충병의 이동경로가 되지 않도록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개발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임가소득 보전 향상을 위해 임업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
- 산림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문제와 관련하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산림경영(벌채, 숲가꾸기 등)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통해 정책을 재정립할 것
- 국내 목재산업 성장과 국산 목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산불피해 지역에 따른 맞춤형 복원을 추진할 것

- 임산물(임목)재해보험시스템 운영을 정상화할 것
- 산림사업주체 간 역할 재정립으로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
- 조림사업 시행체계 및 수종 구조를 개선할 것
- 수입산 목재펠릿에 대한 산업부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
- 임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공·정비 기준을 강구하고 품질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
- 산지무단형질 변경 후 ‘셀프허가’ 행태를 근절할 것
-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관리 및 변상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감사결과 조치 이행 현황을 공개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등 숲가꾸기 사업의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기계톱 사용 시 친환경오일 이용을 확대할 것
- 경기도 가평군 캠핑장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원인을 규명할 것
-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국산목재 확인제도, 우선구매제도 등 홍보를 강화할 것
- 임업기계장비 운용을 활성화할 것
- 밀원수를 조림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선택형 직불제를 도입할 것
- 산불피해목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 국유재산이 불법 점유·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산림사업 지원을 검토할 것

- 임업직불금 자격 요건을 개선할 것
- 불법 목재제품 시중 유통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유산영향진단 지표에서 목재수확을 제외할 것
- 원활한 숲 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임업인 피해보상제도를 구체화하고, 피해지 복구체계를 개선할 것
- 노지표고버섯, 마, 더덕 등 임산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을 확대할 것
- 산불피해목이 고부가가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책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산악구조대 운영 의무화 등 「산림휴양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 산림항공구조대 자격을 강화하고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을 확대할 것
- 숲길 조성 시 타당성평가 예외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이양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숲길 통합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것
- 공공 수목장 조성을 확대하고 사립 수목장 평가 인증제를 도입할 것
- 「산불특별법」상 산림투자선도지구 조항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강화할 것
- 법령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산림노동자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과거 도시숲 조성사업 대상지를 전수조사 하고 산림조합과 계약 시 부가세 부당지급 사례를 실태조사할 것
-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산림 내 불법 야영 등 단속 대책을 마련할 것
- 새만금수목원 조성 시 지역업체 계약 및 인력 고용 비율을 확대할 것

-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할 것
- 산림약용작물 산업화단지를 조성할 것
-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대응을 강화할 것
- 섬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처우를 개선할 것
- 생태계 교란 식물 방제를 지원할 것
- 국내 희귀수종 보호 및 산업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정원 지정 절차를 개선하고 지방정원·민간정원에 대한 사업비 등을 보조할 것
- 산불관제시스템, 재난문자알림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실시간 산불정보시스템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 국산 드론 개발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드론 수입 국가를 다변화할 것
- 스마트 산불감시(ICT 플랫폼, CCTV) 관련 운영체계를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연령을 하향할 수 있도록 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
- 실시간 산사태위험도 시스템 과부화로 인한 산사태 예·경보 미비 문제를 개선할 것
- 산불 대응 시 위성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대응을 위한 현장 점검, 방제기술 고도화 및 예산 구조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소나무재선충 훈증더미 적기 제거를 위한 시스템 연동 등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 지방자치단체 산불진화 헬기 구입·임차 비용 등의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
- 산불 발생 시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산불 지휘체계를 강화할 것
- 산악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친환경 러브버그 방제대책을 마련할 것
-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라 산림재난 발생 시 산림청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철저히 대응할 것
- 땅밀림 위험지도 제작·공개 등 땅밀림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
-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내병성 품종 개발, TF팀 구성 및 해외 사례 참고 등 방제 전략을 전환할 것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방제 중심 정책에서 수종 전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
- 러시아산 헬기 MRO업체의 「관세법」 위반 혐의에 따른 구형에 대응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규정을 개정할 것
- 산불진화헬기 가동률 제고를 위한 신규헬기 도입 등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
- 생활권 중심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대피체계를 구축할 것
- 재제작 헬기 부품 수급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상황별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차량 등 활용 기준을 마련할 것

- NDMS 사유재산 피해 입력 항목 확대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
-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산사태위험등급의 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할 것
- 산림항공본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 민간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개선할 것
-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지자체 예찰용 드론감시단을 지원할 것
- 산불 헬기 운용 조종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내실있는 사방사업을 추진할 것
- 산사태 복구 관련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노후화된 사방댐의 유지·관리를 강화할 것
- 치산기술협회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포항 사방기념공원을 국가기관으로 전환할 것
-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할 것
- 대형헬기 구매사업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
- 산불지휘체계 통합을 위한 예방·진화 역량을 강화할 것
- 천연기념물 소나무의 재선충병 예방을 철저히 할 것
- 산림청장 임명 관련 인사 개입 의혹과 산림 분야 전문성 부족에 대하여 명확하게 검증할 것
- 산림청장에 대한 성남시 백현동 환경영향평가 및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관련 논란을 규명할 것
- 중증장애인 의무구매율을 향상시키고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갑질 실태조사 응답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 정식 등록 업체로 허위 광고·홍보하는 사설 리딩방을 포함한 불법경마 문제를 개선할 것
- 영천경마공원에 경주마를 정상적으로 배치한 상태에서의 경마 시행을 검토할 것
- 영남권 경마의 지역 간 공정한 레저세 배분 방안을 검토할 것
-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사업을 확대할 것
- 마권 구매 상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마권 실명 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경주 전 도핑검사 축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마주 자격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 경주은퇴마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선진국 수준의 말 복지 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레클리스와 말산업을 연계한 행사계획을 제출할 것
- 말 생산농가 지원 등 말산업 육성 지원을 확대할 것
- 제주마 생산 기반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직원 자녀 및 친인척의 경마지원직 채용 문제를 개선할 것
- 직위 미부여 제도를 개선할 것
- 여성 임원 비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유튜브 콘텐츠의 성인지 감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것
- 내부감사 및 징계 시 도덕불감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것

- 외부 변호사 선임을 최소화하고 사내 법무팀 기능을 강화할 것
- 마사회 전산관리 예산 및 인력을 강화할 것
- 임원에 대해서도 질병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규 개정을 검토할 것
- 사행성 확산 방지 목적의 온라인 발권이 오히려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는 실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마사회 유실물 처리 방법을 개선할 것

5. 한국농어촌공사

- 청렴도를 개선하고, 민원 지연 등의 문제를 시정할 것
- 1년 미만 단기재직자 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녀수당을 지급한 이후 회수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에서 5년 연속 지적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것
- RE100 홍보 콘텐츠의 검수 체계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의 수질기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용수 수질기준 상향을 추진할 것
- 극한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배수시설 개선 및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 기후적응형 배수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용수시설 통합운영관리시스템(TOMS) 확대를 검토할 것
- 오봉저수지의 생활용수 과다 공급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책무를 다할 것
- 오봉저수지 농업용수 공급 중단 관련 강릉시 공문 문제에 대하여 대응할 것
- 전기시설의 저지대 위치에 따라 침수 우려가 있는 배수장을 조속히 이전 완료할 것
- 71세 이상 고령자의 수리시설 감시원 업무 수행 문제를 개선할 것
- 수리시설 자동화율을 제고하고 자동화 사업 종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노후화된 저수지의 근본적인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수질 개선을 위하여 근본적인 오염원을 차단할 것
- 저수지 내 사전 방류시설 설치를 확대할 것
- 수리시설 내 안전대책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연차계획을 마련할 것
- 수문 개방식 콘크리트 댐 도입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저수지 안전을 위한 CCTV 관제시스템의 개선을 검토할 것
- 진주 명석면 침수사고의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후속 대응을 할 것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용수 재이용률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 시스템을 마련할 것
-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마련하고 사업준비를 진행할 것
-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 대상지 선정 시 지역균형 방안을 마련할 것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개선할 것
-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부과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
-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농지 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농지은행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것
- 농지 집단화를 위해 농지은행 임대방식 개선을 검토할 것
- 농어촌공사 임대수탁 농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 실태를 점검하고, 원상복구 비용 등 소유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영회생사업 예산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예산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새만금산단 4·9공구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
- 당초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해외농업 자원개발사업을 재검토할 것
- 익산 망성면 지역 배수개선사업을 면밀히 시행할 것
- 서귀포 소정방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
- 어촌개발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것
- 국가농업 AX플랫폼 사업의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캄보디아 현지 한국직원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
- 수원 고색지구의 농지 수의계약 관련 문제를 자체감사할 것

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의 철저한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
- 할당관세 배정 품목별 사후평가체계를 마련할 것
- 물가안정 효과가 제한적인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을 축소할 것
- 수입농산물 반송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TRQ 수입시기를 검토하고 개선할 것
-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효과가 유통업체로 귀속되지 않도록 사업을 재검토할 것
- 논콩 소비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것
- 가루쌀 시장 확산 및 소비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샤인머스켓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수출전문단지 조성 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국산쌀 소비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신시장 판로 확보를 통한 농림수산물 수출 강화 방안 및 특정국가 수출 쏠림 현상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소매유통 단계의 유통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장도매인제도 및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역할을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외 하역비 징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할 것

-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 과정 상의 공급업체 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할 것
- 온라인도매시장 참여율 제고 및 활성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온라인도매시장 내 수입 농수산물 비중 확대 문제를 개선할 것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신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의무 이행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 성과지표를 개선하며, 다양한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 공공배달 통합포털사이트 활성화 및 지속 방안을 마련할 것
- 자녀수당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의 대출한도 및 금리 관련 정부지침을 준수할 것
- 사이버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7. 축산물품질평가원

- 돼지등급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AI 솔루션 도입을 통해 축산물 품질·등급 체계의 신속성·정확성을 제고할 것
- 축산물이력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반행위 단속·관리 체계를 점검할 것
- 축산유통 디지털 플랫폼 활용 확대 등 분석 자료의 농가 및 유통업체 제공 방안을 검토할 것
- 저탄소 인증축산물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기관장 상임화에 따른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기계약직 채용개선 등 조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

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최근 5년 동안 ‘가축질병대응 기술개발’ 관련 사업이 다수 진행되었음에도 미진한 가축전염병 국내백신 기술 수준을 제고할 것
- 첨단기술 분야, 지역균형발전 분야 등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R&D 예산을 증액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연구직 직급별 정년 격차를 개선하여 인적 자원 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
- 승진심사 제도 개선, 장기 근속자 우대, 자동 승진 제도 도입 등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연구 부정행위에 따른 환수금 중 미환수 금액을 조속히 환수할 것

1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업재해 피해 현황 관리체계 마련, 신고율 제고, 피해액 산정의 신속성·공정성 확보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감귤·만감류 재해보험 보상기준을 개선할 것
- 낙과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조사자를 파악하고, 피해 인정과 관련한 현장 보존 및 피해 산정 기준과 개인별 보험률 적용에 대해 검토할 것
- 임목 관련 보험상품 개발을 검토할 것
- 농업 정책자금의 부적정 집행이 적발돼도 지자체나 농협이 자체 판단으로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정상화 조치'는 감독의 실효성을 훼손하므로, 정상화 조치 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11.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공항만 외래병해충 분포조사의 체계적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내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1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일부 검색사이트에서 빈집은행 검색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K-푸드 해외 온라인 반응 및 인식 분석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13. 한식진흥원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한식 및 K-FOOD 홍보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할 것
- 한식진흥원 사업에 대한 홍보 및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한식인지도 제고 및 한식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 인사기록카드 내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를 개선할 것

14.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장에서 나아가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강화할 것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지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문제를 개선할 것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중소 식품기업들은 자체 복지·교육 여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15. 축산환경관리원

- 동물복지 도축장 설치 등 동물복지축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축산 혁신 지구 시범사업 내 양돈농가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른 양돈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16.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국내 사료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종자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
-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 근로보상을 현실화하는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인사적체 해소와 경력개발 지원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 상임이사 임기만료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 및 상임 부원장직 확대 등 기관운영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과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는 등 노사 신뢰회복 및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17. 한국임업진흥원

-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산림보호구역 관리 체계의 문제로 피해를 입은 산양삼 재배 임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귀산촌 교육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산림인증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갑질 실태조사 응답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해당사항 없음

19.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지역상생사업 예산 확보 등 사업지속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백두대간수목원 홍보 전략 및 미래세대 유치 방안을 마련할 것
- 갑질 실태조사 응답률 제고를 위한 참여 촉진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산목재 우선구매 목표를 달성할 것

20.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해당사항 없음

21. 한국치산기술협회

- 한국치산기술협회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앙회 여성 직원이 차별받지 않는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장애인고용비율 및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농협의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농협퇴직자 단체인 농협동인회에 대한 무상지원을 중단할 것
- 중앙회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구조는 상임회장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보수 수준에 비추어 부적절하므로, 해당 겸임 구조를 시정할 것
- 농협중앙회 주사무소 이전을 검토할 것
-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전문가, 노조대표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의무화할 것
- 조합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임원 의무도입 미준수 조합에 대하여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여성조합원의 복리후생 및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할 것
- 지역조합의 젊은 직원 퇴사 증가에 대응하여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중앙농협 골드바 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조합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지역조합 예산집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업무추진비 선심성 지급 재발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

-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등 불법·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임원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부정·비리 또는 성비위 혐의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조합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상임이사 등 임원 의무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을 이행하지 않는 지역농협에 대하여 패널티 부과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지역조합의 공사 발주 시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통해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금융당국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적용 시점을 2026년 6월까지 추가 유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적자 조합 경영평가 기준 및 성과급 기준을 개선할 것
- 지역조합의 적자 확대와 연체율·부실채권 증가로 인한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부실 우려 조합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자구노력 이행 여부 점검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지역조합의 부동산 PF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발생한 부담이 농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동산대출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역조합 금융사고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지역조합의 태양광 관련 대출상품의 구조와 운영 실태를 점검·정비하여 부작용을 방지할 것
-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지역조합의 인력충원, 교육강화, 시스템 보

강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보이스포싱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원들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보이스포싱 피해액에 대한 보증보험 도입 등의 방안도 강구할 것
- 농협네트웍스가 쌀과자 제조기를 보급하는 입찰 과정에서 업체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른 물품 구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영남채소농협의 회원가입을 지원할 것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의 영농정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농업 분야 세제감면 축소와 교육세율 인상으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국가 농업 AX 플랫폼 사업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할 것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규모 및 보증 범위 확대에 따라 실무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직급별 인력 비율 조정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상호금융의 비대면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위조신분증을 통한 사기 사건이 발생한 만큼 철저한 보안시스템 구축과 적극적인 기술투자를 통해 피해 발생을 예방할 것

【농협경제지주회사】

- 일부 농축협이 면세유 취급수수료(2%) 부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
- 공영홈쇼핑에서의 이중수수료 부과 문제를 개선할 것

- 농협유통 구매권의 유통자회사 이관 대안을 마련할 것
- 샤인머스켓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전북특별자치도 내 논콩 가공공장 설치를 검토할 것
- 지역별 RPC 벼 수매 가격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할 것
- RPC에서 수매가격에 쌀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할 것
- 남해화학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체근무제 개선방안, CCTV 설치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 남해화학의 적자 발생 문제를 시정할 것
- 농협 전기차충전시설 내 화재 진화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농협하나로유통 당기순손실 지속 발생에 따른 사업혁신 방안을 모색할 것
- 노후화된 양곡창고를 조속히 개선할 것
- 농협 공판장의 수입농산물 판매에 대한 취급원칙 및 제한기준을 마련할 것
- 공판장 하자육의 농가 변상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호남 등 세부 가공이 제한된 미트센터의 추가 가공설비를 마련할 것
- 주산지 중심의 생산자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 당국과 감귤 군납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이중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것
- 군급식 관련 수의계약 유지 및 국산 식재료 우선 공급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농협의 공익적 관점에 따른 홈플러스 인수 가능성을 검토할 것

- 농협의 비료가격 결정시스템, 입찰시기 및 조정 주기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것
- 농협유통 및 농협하나로유통 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농협몰 및 라이블리의 통합운영 및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

【농협.금융지주】

- 농업인의 금융 이해도 제고와 건전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교육을 활성화할 것
- 자본시장 선진화 역할을 선도할 것
-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사기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임직원에게 대하여 구상권 행사, 채권보전 조치 등 책임을 물을 것

【농협은행】

- 캄보디아 등 해외로 불법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보이 스피싱 예방, 사후 모니터링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외 단체에 대한 기부 시 사전검증과 자금사용 투명성 확보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착오송금 반환에 대하여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 금융사고에 대한 기존 대책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농협은행-지역조합 간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위탁 약정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재검토하여 개선할 것
- 농협은행-지역조합 노동자 간 보험판매 보상 등에서 차별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농협은행이 판매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지자체의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농협과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대출 과정에 대하여 점검할 것
-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농협생명보험】

- 판촉물 계약 및 수의계약 전반에 대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당 계약·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농협손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갱신 계약 시 적용되는 가입조건 개선을 검토할 것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논콩, 벼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
- 정책보험 손익 적자와 관련하여 가입률 제고, 부실채권 관리,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 신용 위험 경감 대책을 마련할 것
- 뚝은감 낙과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조사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농가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
- 농업인의 보험 접근성 제고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자동차보험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진출을 검토할 것

23. 산림조합중앙회

- 산불예방 숲가꾸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묘소 훼손 등 사건·사고에 대한 조합의 처리 및 보상 규정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유통 및 판매부분 운영 적자와 온라인 판매 부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임산물(임목)재해보험시스템 운영을 정상화할 것
- 산림조합 티슈카페사업 관리·운영 방안을 개선할 것
- 산림사업 시행 시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산림조합의 여신건전성 악화에 따른 조합의 개선 방안과 중앙회 차원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
- 전기차 과충전 방지장치 및 화재진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4. 해양수산부

-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우리 해양권의 수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
- 서해 중국 불법 구조물 설치 및 해양조사 방해 등으로 우리의 정당한 해양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
- CPTPP 가입 및 한-말 FTA에 따른 우리 어민 예상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북한 우라늄 공장 폐수 배출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는 핵종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사대상에 빠져있는 핵종에 대한 검사 및 (검사)장비 추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는 30by30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 블루카본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공원 조성용 사업으로 변질되어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 해상풍력 발전사업 진행 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어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등 해양레저 관련 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추진할 것
- 지자체별 해양관광레저 사업의 중복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관광레저 연계벨트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전북지역의 특화형 크루즈 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
- 연안 크루즈 활성화를 위하여 순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비지정해변에 대한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전국 해수욕장 중 동력해상기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종할 면허소지자가 태부족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해수욕장 안전체계를 마련할 것
- 해양전시시설 내 장애인 관람 지원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수협 등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관측 부이(觀測 浮標) 점검주기 규정을 개선할 것
- 충남지역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 건조를 지원할 것
-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것
- 경남 남해안 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어항관리선 배치를 검토할 것
-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극지연구 전문인력의 양성방안을 강구할 것
-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결과 작성된 해도의 민간공개 여부를 재검토할 것
- 해안사구 조사 및 보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MMPA(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대응 관련, 어묵이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

- 어업별·업종별 혼획저감장치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
- 대미 관세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한일어업협정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협정 이행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할 것
- 뱀장어 CITES 부속서 II 등재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외 위조·모방 수산식품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외 수산식품 위조·모방에 대해 범부처 조직을 구성하여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세 수산식품기업을 보호할 것
- 수산물 물가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산물 할인대전 사업은 대형 유통업체에 많은 이익이 귀속되고 어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동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 대형 유통업체에 지원이 집중되는 수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사업을 개선할 것
- 온라인 대형 유통업체가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고 정산주기가 늦은 문제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 김 제품에 대한 수출입통계를 정확히 산출하고 김 수출지원 및 김산업 성장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의 효과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것
-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상 소비자에게 공개 가능한 정보를 검토하여 이력 조회시스템을 보완할 것
- 수산물이력제 관련 인력 충원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중국산 활바지락에 대한 수입검역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산 불법 포획 암컷 대게의 일본산 둔갑 및 혼입 유통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을 마련하고, 자원 보호 의무와 수입 정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기 성어기 전 관세청·식약처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일본산 암컷 대게 수입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 어선 화재폭발 사고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정착 및 감독관 수 증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 등으로 인한 우리 어선의 안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개선할 것
- 어업인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해 어업인 산재보험 통계를 작성할 것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어민부담 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비율을 확대할 것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금 지급 불가내역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고수온피해 특약 가입 관련 어민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
-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위한 관측자료가 부재한 경우 대체 판정 기준 적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맞게 패류독소 조사체계를 개선할 것

- 어업인의 폐어구 반환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어구부표 보증금 환급을 위한 폐어구 반납장소를 확충하는 등 관련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것
- 수산부산물 자원화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기후위기에 따른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할 것
-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대체품종을 개발할 것
- 수온상승에 따른 해역별 어종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어업구조 재편 방안을 마련할 것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연안어업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확대 적용할 것
- 연안어업 총허용어획량제도 운영시 현행 꽃게와 붉은 대게 외에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유인책 마련 및 어업인 생활안정대책 강화 등 어선 감척 수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감척수요 대비 부족한 예산 확대에 노력할 것
- 어선 감척지원금 과세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 어선청년임대 사업에 정부의 어선 매입 후 임대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것
- 어선 감척 관련하여 정부가 감척 대상 어선을 매입해서 청년들에게 임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소송으로 중단된 국가어업지도선의 건조를 재개하고, 노후 어업지도선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여 해역 공백을 최소화할 것

-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및 인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한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내수면 관광·레저까지 연계한 내수면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지역 연계형 사업 등 차질 없이 이행할 것
- 가마우지 개체수 증가로 인한 내수면어업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 내수면 어도 관리가 부실하므로 이에 대하여 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내수면 양식 어가도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전남 지역 수산업계가 소외되지 않도록 진흥방안을 마련할 것
- 전북에 김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가공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영덕항 강구 등의 지역을 참다랑어 허브 항만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 오분자기 생산량 감소 대응을 위해 산란·서식장 조성을 적극 지원할 것
- 경남 국가중요어업유산관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
- 부안 낚시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
- 수산물 위판장의 원활한 현대화를 위해 예산 집행률 제고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삼천포수협 위판장 현대화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
- 자갈치시장 무상사용 협약기간 연장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새정부 정책방향이 반영된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 어촌생활환경정비 방침을 수립하여 어촌 빈집 문제를 개선할 것
- 어촌뉴딜사업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을 할 것
- 어촌 인력부족에 따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지역별 편차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 어촌, 어항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I활용 안전예측시스템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정한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 어업 정착을 위한 어업경영비가 농업 분야보다 많이 소요되는 어업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어업인 지원 사업을 개선할 것
- 어업인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어업인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예산 지원을 검토할 것
-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조건 소급 적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023년 이전에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한 대출조건 변경사항의 소급적용을 검토할 것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산분야에 어업용(농사용) 전기 적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수산관계법령 상 1차 위반만으로 허가 취소토록 하는 처분 기준을 정비할 것
- 소금산업에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할 것

- 제6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
- 현행 여성어업인 육성 사업의 실효성 확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어업인 의견조사 보고서에 담긴 어민들의 의견을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
- 농림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사업과 섬마을 기본소득 사업을 접목하여 섬에 대한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할 것
- 수협 부당대출에 대해 외부 감사를 실시할 것
- 부실경영이 지속되는 추자수협의 경영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플라스틱 어상자 예산 확대 또는 현장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
- 긴급방류 시 동일해역에서 일시적 대량방류를 제한하고 있는 조피볼락 관련 지침 이행 여부를 관리할 것
- 긴급방류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중간어 단가 신설을 검토할 것
- 서해 NLL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
- 타지역 어선의 추자도 해역 불법조업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
- 안전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서해5도 백령도 북방어장을 확장하고 야간 조업시간을 연장할 것
- 낚시어선에도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도입하고 낚시법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
- 낚시로 인한 어획량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 전복 생산량 증대로 전복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글로벌 김산업 주도권 사수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김산업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수산 기자재 관련 법안 등 제도 마련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
-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 축소되더라도 어업인 경영안정자금과 비축자금은 유지할 것
- 수협중앙회 본사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납입 대비 보험금 지급이 저조한 수협 재해보험의 수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가거도항 방파제 공사의혹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
-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손실보상액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마을어장에서 생산하는 바지락 등 패류도 보험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개발할 것
- 지특회계로 이관되는 청정어장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및 지자체와 협조할 것
- 단김 양식 및 위판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등 추자도에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공원 내 양식장 월동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상국립공원 내 월동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어촌어항공단 직원의 기본급 상향 등 처우 개선에 대해 검토할 것
-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을 적극 검토할 것
-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통해 과거 북극항로 운항실패 요인, 문제점 등을 찾아 극복 대안을 마련할 것
- 북극항로 개척 관련 범정부 협력체 및 민간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
- 북극항로가 가지고 있는 이점과 위험요인, 경제성 확보 및 외교적인 문제 등 다각적 요소를 고려하여 북극항로 개척에 접근할 것
- 북극항로의 환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EU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검토할 것
- 북극항로 개척 관련 데이터 구축, 항로 안전 제공 등을 위한 북극해 운정보센터를 포항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수리·정비 등으로 여객선 미운항 시 대체선 투입 의무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연안여객선이 사고·수리 등으로 미운항할 경우 대책을 마련할 것
- 울릉도 항로의 미운영과 관련하여 울릉도 거주주민 및 관광객 등의 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연안해운의 여객 공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여객선 요금제 할인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
- 내항여객선 안전을 위한 선원의 안전·보건문제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등 내항선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ILO 어선원 노동협약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선원노동위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을 검토할 것
- 해운법에 따른 해운선사 간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을 실시할 것
- 연안화물선사와 화주 간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연륙도서민에 추가 배송비를 부당하게 부과한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 및 부당액 환수 등 조치할 것
- 연륙섬 주민에게 청구되는 추가택배비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 후 환수조치 할 것
- 평택항 내 전기차 화재 및 화학 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항만별 맞춤형 항만 재해정보 통계 구축을 검토할 것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복구 점검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위를 밝힐 것
- 항만 보안업무 일원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
- 제주항 항만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IMO 넷제로 전략 준수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
- 국가필수선박 목표척수 달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항만공사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할 것
- 항만공사가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등 인구 감소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
- 군산항 준설 필요성 증대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
- 감천항 내 기존 수리조선소 폐지 및 신규 단지 조성에 대한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군산·새만금항만공사 설립에 대해 검토할 것
- 연안 자율운항선박(K-CASS) 추진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마련할 것
- 여수항만 D-1 정박지 해상환적 재개를 검토할 것
- 해운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IOT 장비 보급 및 활용 지원사업의 재개를 검토할 것
- 제6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이 실현 가능한 미래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매년 발생하는 선박화재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
- 국제운송규정 강화로 숯 수입 차질이 예상되므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이용자가 저조한 국립등대박물관 전시 안내 앱을 개선할 것
- 화종별,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북극항로 거점항만을 육성할 것
- 우크라이나 항만재건 지원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 등을 재검토할 것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다대부두를 포함할 것
- 항만기본계획이 특정 정치인의 치적 쌓기 수단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사업 검토의 원칙과 중립성을 철저히 견지할 것
-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서울항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행정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
- 지방관리 항만의 국가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할 것
- 북극항로 개척 관련 제주항의 크루즈 육성 및 거점항만 육성 연구용역시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할 것

- 새만금신항이 푸드허브항, 수소전용·콜드체인 항만으로 기능·역할할 수 있도록 할 것
-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새만금신항 배후부지를 조성하고, '30년까지 3 선석을 추가 건설하도록 할 것
- 항만자동화 국산화 비율 목표치 달성 및 5G 통신망 장비·기술 국산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여수광양항을 AI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컨테이너 부두 항로를 중심할 것
- 우리나라 전체 항만에 대해 항만 안전사고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항만안전사고 발생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호법,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
- 항만에 특화된 재해통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연안침식 대응 관련 국가의 지원을 강화할 것
-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해 특혜 비리 관계자의 처벌과 해양수산부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
- 비상사태시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항만운영협약 제도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부산항 환적 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평택·당진항 국도38호선 및 포승~평택 철도 공사를 조기 추진할 것
- 감천항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남해 미조항 방파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
- 본부 및 소속기관간 인력 배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부산이전 관련 인력 이탈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
- 공공기관 기관장과 상임이사 인사를 조속히 진행할 것
- 해수부 내 여성인력 양성을 통해 균형인사를 위해 노력할 것
- 산하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온나라 해킹사고 보안대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이중화, DR 구축 등 데이터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 인사기록카드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해수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향후 세월호 선체절단물 폐기 관련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처리할 것
-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외국인 어선원 고용문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예선사업자와 해운대리점사업자간 불법적인 유착 의혹이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예선운영협의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해기사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해기사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 양성된 해기사의 북극항로 실전경험을 쌓기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할 것.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시 화중별·항만별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지역 균형적으로 추진할 것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기후변화 시책 규정할 것
- 바다내비 센터 이전지가 부산 임시청사와 떨어져 있는데 이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김 판매기업의 독도경비대 기부 관련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확인할 것
- APEC 대비 해양 분야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해양쓰레기 수거비용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확대할 것
- 부산항 신항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우리나라 친환경 선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실질적 대책을 수립할 것
- 북극항로 개척 관련 항만별 기능분담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민간투자개발사로 재취업한 퇴직공무원 문제의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서해어업공무원 해양수산부장(葬) 거행 관련 재조사할 것

25. 해양경찰청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제기된 해양경찰청의 조직적 가담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
-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출장보고서 누락 및 방첩사 업무협약의 과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
- 서해북방한계선(NLL) 등 우리 관할 해역을 집단적으로 불법 침범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나포 시 징수한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하여 잠정조치수역 내 경비구역을 확대하고, 대형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응할 것
- 한반도 주변 광역 해역에 대한 무인 감시능력 확보를 위해 미래형 해양경비체계(MDA)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함정 조리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형 경비함정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것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에 대비하여 해상 테러 등에 대한 해상 경호 및 안전관리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무인기 도입 시 실제 비행 성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용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양경찰청 초계기가 2012년 이후 추가 도입되지 않고 일부 항공대(김포·무안)에만 배치된 점을 고려하여,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신규 초계기 도입을 추진할 것
- 원거리 해역에서도 장시간 수색·구조 임무 수행이 가능한 대형헬기 도입을 추진할 것
- 대형헬기 추락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신안 해역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라 목포광역시VTS와 전남 해상풍력 간 레이더 연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령 개정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및 관련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전담 인력 확충, 탐지장비 보급, 국제공조 확대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
- 밀입국 등 국경범죄 대응을 위해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항공기를 도입하는 등 해상 경계를 강화하며,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확대할 것
- 수사권·기소권 분리 환경에 대응하여 전문 수사인력 양성, 수사연수소 직제화 등 수사 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양경찰의 수사권 범위를 명확히 정비할 것
- 기소 송치 후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분석·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것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표 번복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것
- 가거도항 방파제 공사 관련 불법 의혹 및 해양경찰청 수사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동 사건과 관련한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
- 영흥도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파출소 근무수칙 미준수, 상황보고 지연, 초기 대응 부실, 구조장비 미지참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해루질 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안전관리, 갯벌 출입 통제 구역 지정, 야간 해루질 제한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사고 위험성이 높은 테트라포드 지역에 대해 출입 통제구역 지정 및 순찰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 음주운항 등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것
-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증가에 대응하여 관리·점검 체계를 개선할 것
- 수상·수중레저 안전관리 일원화에 대비하여 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와 점검을 철저히 할 것
-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양재난 발생 시 수색·구조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할 것
- 내구연한이 경과한 5천톤급 삼봉호(제2독도함)에 대해 대체 함정을 건조할 것
- 전자충격기 등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검사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산업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함정 안전모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서부정비창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산정비창의 노후 시설 개선 및 관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재해복구체계(DR) 구축 여부를 점검할 것
- 해양경찰 연구센터의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3D 프린팅 관련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 해양오염 관련 변상금 미수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측정 간이분석장비에 대해 주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할 것
- 파출소 근무 규정 위반 및 성범죄 등 공직기강 훼손 사례에 대응하여 고강도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
- 청렴 체감도 제고를 위해 내부 청렴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및 소송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계 대상자도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할 것
- 평택 대산항 경찰관 공상사고 관련 전면 재조사 및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
- 함정스피커 등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할 것
- 해양경찰병원 설립,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을 확보할 것
- 함정 등 현장과의 소통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직장협의회 가입 기준 확대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제적 해양경찰 임무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검토할 것
- 고흥 및 제주동부 해양경찰서 신설을 검토할 것
- 재직기간 5년 이하 경찰관 의원면직 증가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함정·파출소 등 지방관서 현장 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 경찰관의 고위직 비율을 확대할 것
-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무·직무 중심으로 교육훈련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

- 구조 인력 확충과 전문 교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필요성을 검토할 것
- 해양경찰청의 업무 범위 근거가 불분명한 수산업협동조합 선거 수사를 중단하고 해당 인력을 급증하는 해양 마약 범죄 대응에 배치하여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

26. 부산항만공사

- 사이버보안 인력·예산을 확충하고 항만공사 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
- 관리자산 및 예산 규모 대비 전반적인 인력 부족과 안전관리 인력·예산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사회공헌 예산을 증액할 것
- 대규모 투자사업 사업관리·심사 강화하고 재무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할 것
- 북극항로 전략 수립 시 정부의 멀티포트 전략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
- 부산항보안공사 사장 선임 시 특정 기관 출신 편중 문제를 개선할 것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여부를 점검할 것
- 경영혁신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할 것
- 감천항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것
- 부산항 클러스터 사업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친환경 연료 병커링 인프라 구축계획 및 사업화 계획을 수립할 것
- 영도 크루즈 터미널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
- 청학안벽 활용 용도를 명확히 정리할 것
- 신항 7부두 물동량 확대, 대기 시간 감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신항 터미널 과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제주-부산 크루즈 활성화 공동협력 및 연안화물 노선 추가 방안을 마련할 것
- 항만공사 간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

- 항만공사 보안업무 청경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
- 불법 전대와 임대 관리 부실 문제를 점검하여 적절히 조치할 것
- 장기 방치 선박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것
-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을 확대할 것
- 드론 테러 대비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것
-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AMP(Alternative Maritime Power)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신항의 질적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동북아 허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할 것
-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신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
-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할 것
- 해외사업 인력관리 비용이 총인건비에서 제외되도록 기재부에 적극 요청할 것
- 북항 재개발에 있어 공공성 훼손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27. 인천항만공사

- 미납채권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사이버보안 관련 인력·예산을 확보하고 항만공사 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
- 안전관리 인력·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 공사 부채 비율 현황을 점검할 것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여부를 점검할 것
-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항만배후단지 임대 기간을 형평성 있게 연장할 것
- 친환경 연료 병커링 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할 것
- 인천-제주 항로 재개를 위한 지원방안 및 계획을 수립할 것
- 골든하버 부지매각 계획 및 근린공원 미개방 관련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
- 항만 보안업무 청경 일원화를 추진할 것
-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을 확대할 것
- 드론 테러 대비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것
-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중고차 수출 활성화
화를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28. 여수광양항만공사

- 공사 부채 비율 현황을 점검할 것
- 공사 미납채권을 관리할 것
- 사이버보안 관련 인력·예산을 확보하고 항만공사 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
- 수익계약 증가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할 것
- 항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대한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있는 마스터플랜을 추진할 것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공석인 신임 사장 조속히 인선할 것
- 정보시스템 DR을 구축할 것
- 크루즈 특경 위·수탁 계약 관련 징계 감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율, 수익률 저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여부를 점검할 것
- 드론 테러 대비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것
-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

29. 울산항만공사

- 인사평가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사이버보안 관련 인력·예산을 확보하고 항만공사 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
-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사회공헌 예산을 증액할 것
- 미납채권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것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을 추진할 것
-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유관기관과의 협의 통해 토양오염 정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
- 항만 보안업무 일원화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것
- 드론 테러 대비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것
- 친환경 연료 병커링 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할 것
- 항만 게이트 전동화 가능성을 검토할 것
- 항만 간 중복 투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불법 전대, 임대 관리 부실 문제 점검 후 적절히 조치할 것

30. 해양환경공단

- 해파리 폴립 제거 잠수인력 양성 및 해상풍력 관련 해파리 폴립 서식지 증가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것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수거 목표 달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공단이 보유한 유희수기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통하여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할 것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여부에 대하여 점검할 것
- 민·관·학이 함께 폐어구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
- 중앙부처의 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남강댐 방류로 사천만 등 남해안에 해양쓰레기가 유입되어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노력할 것
-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노후선박 교체, 공공집하장 설치 등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노력할 것
- 해양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관련, 해양환경측정망 수준의 전문인력, 예산(분석장비)을 적극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위치미상 및 고위험 침몰 선박의 잔존유 제거·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
- 대형 해양재난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국영 구난 전문기관 신설 방안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중장기적으로 협의 할 것
- 다목적 대형 방제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

3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을 추진할 것
- 폐어구 재활용 체계와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할 것
- 해양수산 R&D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보안 관리를 강화할 것

32. 한국수산자원공단

- 수급업체를 포함하여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 정보보안 취약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담금을 납부한 바, 장애가 직업 선택에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수산종자방류사업의 품종별 효과 차이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경제성이 높은 품종을 확대하고, 방류 품종 편중을 해소할 것
- 사천·남해권을 포함한 광역단위 자원 회복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집중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바다숲 조성사업의 효과를 재검토하고, 바다사막화에 따른 피해 분석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제기구의 의무승선률 확대 기조에 부합하도록 오피서버 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보고할 것
- 수산분야 전문가 파견 ODA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어촌소멸 및 고령화 극복을 위하여 어선청년임대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 확대 및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어선청년임대사업의 임대인(노령어업인)과 임차인(청년어업인)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단 제주본부 시설물 노후화 해소 및 기후변화 대응 품종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와 기후생명자원센터 설립 방안을 마련할 것
- 어부가 판다 플랫폼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 및 담당자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

3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하이브리드 선박의 체계적인 검사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강버스의 전기계통, 방향타 등의 고장원인에 대해 파악할 것
- 선박 시운전 검사 시 운행의 적합성 여부 판단 방안을 마련할 것
- 내수면선박 구명·소방 설비배치 도면승인 제도의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여객선 선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추진안을 마련할 것
- 부유물 감김사고 저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
- 매년 증가 중인 어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미수검 선박관리를 위해 연락불가 어선의 관리체계를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공단의 수지차 보전 미흡으로 자체 수입을 늘리는 과정에서 어민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3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정보보안 취약점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할 것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 상향을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담금을 납부한 바, 장애가 직업 선택에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관내 훈련장 부재로 법정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부권 선원들의 교육훈련 적기 이수를 위하여 경인권 선원 종합비상훈련장 유치에 위한 연수원의 역할을 강화할 것
- 해기사 시험 문제의 적정성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상시적·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35. 한국해양진흥공사

- HMM 매각 방향 및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해운업계의 우려를 청취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
- 내항선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할 것
- 북극항로는 해양전문 정책금융기관인 해양진흥공사가 필요한 금융 지원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
- 중소선사에 적극적인 투자를 지원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것
- 데이터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해복구시스템(DR)을 마련할 것

3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미세플라스틱과 해양쓰레기는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므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진단과 대응 연구를 추진할 것
- 심해저 자원은 국제해저기구(ISA) 관리 아래 있으며, 정부 주도의 준비와 민간기업의 참여를 위해서 정부-민간 협력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
- 2022년 발생한 연구소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 및 사이버보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37. 한국어촌어항공단

- 수급업체를 포함하여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 정보보안 취약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할 것
- 낮은 보수 및 취약한 복리후생 수준 등으로 인해 매년 직원들의 퇴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발굴·수행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 어촌어항공단 등 수산업 관련 기관의 본사 소재지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 어촌뉴딜사업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어촌·어항 특화 정책으로 확대하고, 전담기관화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체계적인 어촌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추진할 것
- 부산 지역의 어촌·어항 개발 및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것
- 수산자원을 활용한 어촌 기업과의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이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청년귀어인을 대상으로 한 양식장 임대료 지원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적극 지원할 것
- 어촌정착상담사 운영 예산을 확대하고, 컨설팅 유형에 따라 상담비를 차등화하는 한편, 더 많은 귀어귀촌인 및 어업인이 상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
- 해양쓰레기 수거·관리 대응을 강화하고, 어항관리선 배치 등 관리체계를 점검·개선할 것

38.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에 만전을 다할 것
- 장애인 전용 서비스 제공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 해양바이오뱅크 자원이 실제 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9. 국립해양박물관

- 연평균 약 80만 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안전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것
- 정보보안 취약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할 것
- 박물관을 방문하는 장애인에 대한 관람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난 5년간 혁신제품 구매 실적이 미흡한 바, 구매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창의적인 민간기업의 역량 발휘를 취지로 하는 민간 투자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

40. 국립올진해양과학관

- 과학관을 방문하는 장애인에 대한 관람 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 지역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해양과학교육을 활성화할 것
-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 청렴도 제고 및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을 추진할 것

41. 한국향로표지기술원

- 캄보디아 ODA 사업을 계획에 맞게 이행할 것
- 한국향로표지기술원 운영과 대외 활동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할 것
- 국립등대박물관과 부표사업소의 인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
- 정보보안 전담인력에 대한 충원 계획을 마련할 것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을 조속히 진행할 것

42. 한국해양조사협회

- 장애인 의무고용을 조속히 이행할 것
- 영해기준점 시설 훼손에 대한 신속 조치 등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자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정보보안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예산 편성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을 조속히 진행할 것

4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도이치모터스 그룹 대출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 진해수협 및 고성수협의 사랑제일교회 대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 여수수협의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 회원조합 횡령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앙 준법감시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조합원 1인당 출자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배당금액은 감소하고 있는바, 과도한 부동산 대출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중앙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검토할 것
- 수협중앙회 본사의 전남 이전을 검토할 것
- 비상임이사 연구활동비 지급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2022년부터 3등급 유지) 상향을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하여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것
-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담금을 납부한 바, 장애가 직업 선택에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도이치모터스 그룹, 사랑제일교회, 우진메디컬프라자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대출 관련 사전 점검 및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 일반대출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할 것
- 상호금융 공동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단위수협의 고위험(브릿지론)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무궁화신탁 등 부동산 신탁 공동대출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마련할 것
- 상호금융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 비율 관리를 위하여 건전성 회복 목표치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
- 비어업인 대출 연체 문제에 대한 관리 및 대응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실채권 매각 자회사(수협엔피엘대부)의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양식재해보험의 낮은 지급률 문제에 대하여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고, 지급 불가 내역에 대한 통계 관리 및 사후 분석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것
- 양식재해보험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 납입 등을 위한 가상계좌제도를 신설할 것
- 양식재해보험의 할증 방식 및 특약(약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소음성난청 어선원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엄격한 지급 기준을 보완할 것
- 해녀학교 교육기간 중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방안을 마련할 것
- 바지락 관련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할 것

- 섬 주민을 위한 자동차 보험 상품 신설을 검토할 것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방 조치를 확대할 것
- 발전소 건설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 손실액을 현실화할 것
-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하여 어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
- 낚시 활동과 관련한 기준 및 어업인 피해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TAC 제도의 형평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상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
- 어선 감척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EU의 뱀장어 양식 CITES 부속서Ⅲ 등재 요청에 대하여 등재 저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투트랙 대응을 추진할 것
- 김 양식 관련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노동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할 것
- 일반선원 및 외국인선원을 대상으로 한 어선원 안전교육을 확대할 것
- 구명조끼 지원사업을 내수면 어업까지 확대할 것
- 구명조끼 지원사업의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현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지원 후정산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내수면 어업에 대한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
-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 모델 다각화, 친환경 인증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원조합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
- 회원조합 임금 체불 실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 수산업의 AI 전환과 관련하여 수협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
- 경제사업 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수협유통(바다마트) 적자 문제에 대하여 구조개혁 등 사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수협유통의 기계장치 및 작업환경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 수협 - 오리온 합작법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김 양식업자와 가공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
- 마른김의 조미김 전환 가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
- 수협사료 공장의 전남 신축을 추진할 것
- 다수의 위판장에서 방조·방서시설 및 위생시설 설치가 미흡한 바, 단계적인 시설투자 지원을 확대할 것
- 산지위판장 및 폐어 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농사용 전기요금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수산물 냉동창고의 프레온가스 냉매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급식에서의 수산물 선호도 저하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한식진흥원·영양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군급식 수산물 물량 감소 문제에 대하여 국방부와 협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방부와의 급식단가 협의 시 수산물 급식비를 물가 및 인건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수협은행】

- 도이치모터스 그룹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하여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것
-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신용대출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여신심사 판단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용평가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
- 신용대출 심사 절차 및 회의록 작성 기준을 강화할 것
- 8년 만에 공시된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영업점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대출 연체율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비어업인 대출 연체 문제에 대한 관리 및 대응 대책을 마련할 것
- 무수익여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자산 대비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조직 진단을 실시하는 등 경영 혁신 노력을 추진할 것
- 수기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 귀어정책(창업)자금 대출 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제도의 순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
-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하여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것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방 조치를 확대할 것
- 음주운전 관련 인사 규정을 강화할 것
- 노사관계 개선을 위하여 콜센터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교섭을 포함하여 노란봉투법 시행에 적극 대응할 것
-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
-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와 관련하여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회사 인수를 통한 자회사 편입 또는 계열사 신설을 자제할 것

44. 한국선급

- 선박검사 관련 징계 건수 증가에 따라 검사 미흡이 우려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 선급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영업 전략을 수립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DR 구축 여부를 점검할 것
- IMO에서 탄소세 도입을 1년 보류한 것을 조선·해운업계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

IV. 일반증인 및 참고인

1. 기관별 증인

(1) 출석 증인

□ 10. 14(화) 농림축산식품부 등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관련	
김홍상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관련	
문영표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사장	공금 유용 의혹 관련	

□ 10. 15(수) 해양수산부 등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금한승	기후환경에너지부 차관	해양쓰레기 관련	
박대준	쿠팡 대표	농수산물 수수료 및 정산주기 연륙 섬에 택배 배송시 추가 배송비 관련	
조영식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장	해양쓰레기 관련	
이문희	한국가스공사 전무	국제선사 LNG선 적취율 제고 관련	

□ 10. 17(금) 농촌진흥청 등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진병삼	(주)미소테크 대표	농촌진흥청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정동원	도이치오토월드 대표	도이치모터스 관계사 및 관련 회사들에 대한 특혜성 대출 의혹	

□ 10. 22(수) 해양경찰청 등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이광진	前 인천해양경찰서 서장	인천 영흥파출소 순직 해경 사건 관련 故 이재석 경사 사망 및 함구 지시 의혹 관련 이재석 경사 연락두절 당시 초동조치 미흡 및 사건 함구 지시 의혹 관련	
구정호	前 영흥파출소 소장	인천 영흥파출소 순직 해경 사건 관련 故 이재석 경사 사망 및 함구 지시 의혹 관련 이재석 경사 연락두절 당시 초동조치 미흡 및 사건 함구 지시 의혹 관련	
김석진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 관련	
한철웅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 관련	
안성식	前 해경 기획조정관	12.3 내란 당시 내란 동조 심문 12.3 비상계엄 당시 총기무장 논의 관련 비상계엄 당시 인력 파견 주장 관련	

□ 10. 24(금) 농협중앙회 등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황수남	도이치파이낸셜 대표	도이치모터스 관계사 및 관련 회사들에 대한 특혜성 대출 의혹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	도이치모터스 관계사 및 관련 회사들에 대한 특혜성 대출 의혹	
정동원	도이치오토월드 대표	도이치모터스 관계사 및 관련 회사들에 대한 특혜성 대출 의혹	

□ 10. 27(월) 수협중앙회 등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	도이치모터스 관계사 및 관련 회사들에 대한 특혜성 대출 의혹	
정동원	도이치오토월드 대표	도이치모터스 관계사 및 관련 회사들에 대한 특혜성 대출 의혹	

□ 10. 30(목)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농축수산물 물가안정 관련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조선해양플랜트 해수부 이관 관련	

2. 기관별 참고인

(1) 출석 참고인

□ 10. 14(화) 농림축산식품부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이중권	죽산콩영농조합법인 대표	논콩 전환 정책 평가 관련	
홍의식	늘봄영농조합법인 대표	공동영농모델 확산	
이도현	한돈미래연구소장	스마트팜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물복지 추진과 축사규제 해소 농촌 신재생에너지 의견 청취	
김보림	종로구 길고양이관리봉사자협의회 대표	고양이 중성화 수술 관리 부실 관련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FTA 피해보전 직불제 연장에 대한 입장	

□ 10. 15(금) 해양수산부 등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박용철	어선원	어선원 소음성 난청 보상 관련 제도 개선	

□ 10. 24(금) 농협중앙회 등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김창수	영남채소농협 조합장	품목조합 농협중앙회 회원 가입 문제	
김영주	공영홈쇼핑 상임이사(본부장)	공영홈쇼핑 추가 수수료 징수관련	
임기웅	전국사무금융노조 (실장)	농협카드의 부실채권 농축협에 매각 및 민생지원금 인센티브 차별	

□ 10. 27(월) 수협중앙회 등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양태용	(사)한국김수출협회 회장	수협, 오리온 김 가공 수출 합작법인 설립 관련	

□ 10. 28(화)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임대진	광주시청 청렴기획팀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투기 문제	
문병완	보성농협조합장 농협RPC 전국협의회장	농협의 농지소유를 통한 청년 취농 공동영농사업의 타당성과 실현성에 대한 의견 청취, 쌀 수급 정책에 대한 평가	

□ 10. 30(목)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심준오	국가항만보안노조연맹 의장	항만보안시설 보안료 징수 관련	
김원택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장	중국산 바지락 성패 수입 검역 현황 관련	
이형매	삼천포해상풍력반대 대책위 특보	경남 육지 해상풍력 관련	
양창호	해운협회 부회장	해운사 공동행위 소송 관련	
윤성현	前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서해피격 관련 입장 번복사유	
명성민	前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現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	12.3 내란 당시 법무검토 관련	

3. 증인 · 참고인 주요 신문요지

□ 10. 14(화) 농림축산식품부 등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문영표(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사장)>	
○ 가락도매시장 6개 공영도매법인의 이익률이 높아 구조적인 개편 및 개혁이 필요 ○ 회계 위반 의혹 등 감사원 감사 사안에 대한 시정 필요	○ 관련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이에 관하여 현장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혁신이나 변화를 만들어내겠음. ○ 지적하신 내용을 잘 새겨서 앞으로는 더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음.
<김홍상(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이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관련 객관적·공정하게 진행할 필요	○ 연구진 선정은 공모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되었음.
<이종권(죽산콩영농조합법인 대표)>	
○ 논콩 재배에 따른 애로사항	○ 최근 수해에 따른 피해가 있는 한편, 논콩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수매 물량 확대 필요
<김보림(종로구길고양이관리봉사자협의회 대표)>	
○ 정부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이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 배터짐 사고 및 탈출 사고, 후처리기간 미준수 문제가 발생하고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은? ○ 농식품부장관님께 하고 싶은 말은?	있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TNR사업자가 없음. ○ 돌봄봉사자 TNR 확대, 관내 동물병원들의 TNR 참여, TNR 직영화 등이 필요함. ○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현장 봉사자 참여 요청하며, 숫자 늘리기 TNR보다는 길고양이의 생명과 복지를 우선하는 TNR 사업을 희망
<이도현(한돈미래연구소장)>	
○ 동물복지 관련 축사 규제 정책에 대한 의견 ○ 돼지 도매시장이 비용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무용론에 대한 의견 ○ 현행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고려했을 때 햇빛소득마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 동물복지는 축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이슈 중의 하나, 그런데 동물복지 이슈가 모든 스톨에 한정돼서 논의되어 좀 더 폭넓은 차원에서 복지를 바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함. ○ 도매시장의 공적인 기능을 감안해서 도매시장이 좀 더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 사업을 진행하되 에너지 복지나 농업·농촌의 에너지 원가를 낮춰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스마트축산 관련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의견 ○ 동물복지, 환경규제 등과 관련한 검토 필요 ○ 생성형 AI 구축을 포함한 AI 관련 농식품 R&D 과제의 목표에 대한 생각	○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농가에서 스스로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관) 기후부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음. ○ AI 관련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현장의 잠재적 수요가 있을 것이므로 R&D 측면이 아니라 상용화나 보급 중심으로 가야 함. ○ 대규모언어모델(LLM) 관련 연구과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 대학에서 실험 삼아 하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현장의 핵심은 농가 참여 인센티브 등을 통한 고품질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임.
<홍의식(늘봄영농조합법인 대표)>	
○ 공동영농을 통해 소득을 2배로 올림, 이와 같은 성과가 가능한 핵심요소는?	○ 지주가 주주로서 공동경비, 공동영농, 기계화하여 수확이 늘고 매출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대한민국 농업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공동영농 시 농지제도 관련 애로 사항은? ○ 공동영농법인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구성원 농지가 농지은행으로 임대 위탁될 경우, 구성원 소유의 해당 공동영농법인에 우선적으로 임대되지 않고, 청년농업인에게 임대되는 규정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들음.	○ 공동영농법인 규모 50ha이상 상한선이 있음. 기준을 20ha 정도로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현행법에 따라 농업인과 임대차계약은 농어촌공사가 하게 되어 있고 농어촌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공개입찰을 통해 청년농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따라서 조합원 땅 주인이 사망 또는 승계를 하는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비조합원이 농사를 짓게 되는 경우 발생, 이런 경우 규모화된 영농조합 농지에서 작부 체계 등 관리가 어려움. ○ (장관) 법인에게 우선 임대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민경찬 (전국한우협회회장)>	
○ 관세 철폐 및 새로운 FTA 추진 가능성 등 FTA로 인한 국내 농축산업계 피해가 예상되는데 FTA 피해보전 직불제도가 금년 연말에 폐지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의견은 어떤지?	○ 실질적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되는게 너무 적음. 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FTA 기금을 마련해주길 요청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국내 50여 생산자단체가 FTA 10년 연장안에 찬성했는데 당시 주로 어떤 논의가 되는지?	○FTA 체결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 100% 보상을 받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의 차액 보전은 필요함. 정부와 국회에서 좀 더 노력해주시길 희망

□ 10. 15(수) 해양수산부 등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박대준 (쿠팡 대표)>	
○ 지난 '23년 쿠팡이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나 달라진 게 없음. ○ 과도한 수수료(10.6%)와 긴 정산 주기(60일)로 영세 농어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정하는지?	○ 로켓배송은 개선하였으나, 중개 거래로 타 택배사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조치가 늦었음. -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 수수료는 상품 가격이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에 대해 즉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기 바라며, 정산주기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금현승 (기후환경에너지부 차관)>	
○ 남강댐 방류로 해양쓰레기, 민물이 유입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해수부와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 부산청에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산하 낙동강 권역실부협의체가 있는데, 정작 피해가 많은 사천만 쪽은 구성이 안 되어있어 검토 필요 ○ 남강댐에 이런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특정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바람.	○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유사 사례 발생 시 해수부와 정책적인 협의를 계속해 왔음. ○ 그렇게 하겠음. ○ 남강댐 건설 당시부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 재난안전관리법의 취지를 적극 공감하며,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적극 협의하겠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박용철 (어선원)>	
○본인이 생각하는 소음성 난청 원인은? ○수협이 소음성 난청 보상 실무 지침 개정으로 필수 제출서류에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포함되어 산재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엔진, 기계 소리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함. ○지침 제정 전에는 소음성 난청 승인율이 90%였는데 현재는 0%에 달한다고 들음. 수협의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문희 (한국가스공사 전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의 국적선사 적취율이 하락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LNG 등 핵심에너지는 국적선사가 운송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부합하기 때문에 가스공사는 외국선박을 이용하는 DES(착선인도조건) 계약 대신 국내선박을 이용하는 FOB(본선인도조건) 계약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것	○국내 해운 조선사업의 파급효과,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안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DES와 FOB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며, 향후 LNG 등 핵심에너지의 국적선 적취율 제고방안을 마련하겠음.

□ 10. 17(금) 농촌진흥청 등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진병삼 (㈜미소테크 대표)>	
○ 국정원으로부터 농진청, 농과원, 축산원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개인 데이터가 다크웹을 통해 유출된 사실을 통보받은적이 있는지 확인 ○ 이름, 생년월일, 집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농장 주소, 농축산업 관련 등록번호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 확인 ○ 정보화 용역사업이 농진청 네트워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소테크 네트워크에서 작업하게 된 경위 확인 ○ 어떠한 경위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	○ 국정원 및 농진청으로부터 통보 받았음. ○ 다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 ○ 청 안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나기 전에는 외부사업장에서 일부 작업을 진행하였음. ○ 공유기를 통해서 관리자 계정이 탈취되어 유출되었다고 들었음.
<정동원(도이치오토월드 대표)>	
○ 종전부동산 토지매각 관련 감정 재평가가 필요함. ○ 농어촌공사에 요청한 것은?	○ (한국농어촌공사) 감정재평가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 해당 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수차례 매각 진행했으나, 적절한 매각자가 없었던 상황으로, 경기도, 수원시를 통해 매각자를 찾고 있었음.

□ 10. 22(수) 해양경찰청 등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이광진 (前 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장)>	
○ 인천 영흥파출소 순직 해경 사건 관련, 故 이재석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직원들에게 함구해라 내지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왜곡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데 어떤 지시를 했는지? ○ 근무기록 허의 작성되고 보고 지연되고 규정을 어긴 근무자들의 장시간 휴게, 은폐 지시 등 여러 가지 지적에 동의하는지? ○ 중국인 세 사람이 해루질로 들어갔는데, 나머지 사람들에게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 함구하라는 지시는 안 했고 故 이재석 경사가 구명조끼를 벗어주는 장면 등 훌륭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홍보를 해야했음. ○ 이외에는 언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음. ○ 현장에서 규정을 잘 못 지키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 그렇지만 본청이나 지방청에서 그 어떠한 사실도 은폐하라 함구하라 지시 없었고 거기에 따라 직원들한테는 그런 지시를 한 바는 없음.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음.
<구정호 (前 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장)>	
○ 허위기록 작성, 보고 지연, 근무자 장시간 휴게·배치 등은 객관적으	○ 은폐 지시는 없었음. ○ 언론 대응과 관련해서는 매뉴얼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로 확인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쟁점은 은폐 지시 여부임. 이에 대해 서장으로부터 은폐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에 따라 경찰서 홍보팀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왜곡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당부만 있었음.
<안성식 (前 해양경찰청 해경 조정관)>	
○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20분 전후, 해양경찰청 중회의실에서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음. 해당 화상회의 이전에 ‘총기 무장을 지시하라’, ‘유치장을 비워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내란을 선동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 적법한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동조하지 않는 것이 매뉴얼일 텐데, 불법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총기 불출이나 무장인력의 계엄사 파견을 검토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 그렇다면 그러한 인식 하에서 총기 준비, 인력 파견, 유치장 정	○ 해당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 12월 3일 대통령의 TV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당시에는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상황이 아니어서 적법한 국무회의 절차와 효력을 갖춘 것으로 인식하였음. ○ 당시 해경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떠올렸고, 그 과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비 등의 발언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 증인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일응 적법’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계엄에 동조한 인식으로 볼 수 있으며, 사전 정보 없이 총기 준비·인력 파견·유치장 정비 등의 발언을 한 것은 기획조정관으로서 법률 검토 등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계엄 해제 의결 이후 해경의 인력 파견 및 총기 무장 논의 정황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침묵을 요구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된 이후에 거기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했는지?	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의견 개진 형태로 언급한 것임. ○ 대통령의 TV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을 인지하였고, 당시 공무원으로서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친 적법한 조치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음. 이에 따라 기관 차원의 대응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며, 공식 지시나 계엄에 동조하려는 의도는 없었음. ○ 침묵을 요구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본인이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음. 또한 총기 무장과 관련된 언급은 계엄 대응이나 인력 파견과는 무관하게, 파출소 자체 방호 차원에서 개념을 설명한 것임.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된 이후에는 계엄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계엄 대응 조치를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사전 모의나 구체적 정보 없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기획조정관으로서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사전에 교류하거나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있는지? ○ 사전에 계엄 가능성을 인지하거나 대비 지침을 공유받은 사실은 없는지? ○ 비상계엄이 발동될 정도의 사회적 소요나 전시·사변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 자유방패훈련 등 방첩사가 주도한 군 훈련에 해경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 취하지 않았음. 또한 이후 연락 관 파견 등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음. ○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하였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대통령의 공식 발표를 통해 인지한 상태였으며, 그 시점에서는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여유나 상황이 아니었음. ○ 여인형 전 사령관과는 총 세 차례 만난 사실이 있으나, 비상계엄과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었음. ○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정보나 모의, 사전 지시는 전혀 없었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 있어 구체적인 개인 의견을 밝히기 곤란함. ○ 합동수사본부 편성 훈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직원으로부터 들은 적은 있으나, 실제 해경 인력이 참여했는지 여부는 기억하지 못함.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에 파견될 당시 형사과장 신분으로 파견된 점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당시 인수위 파견 과정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챙겨 갔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인지? ○ 수개월에 걸쳐 30명 이상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종결·발표한 사건을, 인수위 파견 이후 단기간에 번복한 것은 대통령실의 하명이 있었고, 이를 증인이 매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입장은?	○ 전혀 사실이 아님. 인수위 파견 과정에서 해당 사건 관련 파일을 가져가거나 별도로 챙긴 사실은 없음. ○ 그와 같은 하명이나 지시는 전혀 없었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이 깊이 관여하거나 주도적으로 번복을 이끈 사실은 없다고 생각함.

□ 10. 24(금) 농협중앙회 등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 정동원 (도이치오토월드 대표)>	
○도이치모터스와 도이치오토월드가 신용등급을 강제로 올려 대출을 받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대출 주선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진행했으며 농협에 직접 컨택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대출임.
<김창수 (영남채소농협조합장)>	
○영남채소농협을 만든 이유는?	○계약재배 구매사업을 통하여 농민들의 생산비가 보장되는 안정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한편, 직접 출하하여 과도한 유통마진을 줄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함.
○지역농협에서도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굳이 품목농협을 만든 이유는?	○지역농협은 해당 지역 내 모든 품목을 챙겨야 하므로 마늘, 양파에 대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실제로도 지역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은 생산량의 20% 정도에 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최근 출범한 농협으로서 상황이 어떠하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계약재배를 위한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신생 농협이 담보 없이 계약재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정부 정책사업의 경우 최소 몇 년간의 실적을 기반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신생 농협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의 조합원 자격기준이 달라 개정이 시급함. ○ 현재 농협중앙회 회원농협 가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가입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함.
<김영주 (공영홈쇼핑 대표대행)>	
○ 공영홈쇼핑이 정관 개정을 통해 본래 허용되지 않던 주주배당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대로 환원할 용의가 있는지? ○ 농협과 수협의 벤더 운영에 따라 농어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이중으로 수취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2016년 산자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지역농협이나 농업인은 홈쇼핑 납품, 상품기술서, 품질관리 및 배송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행수수료 3%를 부담하고 농협이나 수협에게 대행하고 있음. 농협과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임기웅 (전국사무금융노조실장)〉	
○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신용카드 위탁약정을 체결함. 이용대금 관련하여 결제일까지는 농협은행이 보유하고, 이후 미결제잔액 등을 지역농협에서 인수하는데 정당한가? ○ 직원들이 고유업무에도 바쁘는데 카드보험 판매 실적표까지 만들어서 실적 압박이 있다고 들었음. 어떤 식인가? ○ 정부의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프로모션 보상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차별이 있었나?	○ 공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대손충당금 부담 과다는 경영 위기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 ○ 연초에 소속 농축협으로부터 보험, 카드 판매 실적 목표치를 부여받은 이를 채우기 위해 사비를 털어 가입 해지를 반복하는 사례도 발생함. ○ 농협은행에서 취급한 건은 건당 2,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농축협 취급한 건에 대해서는 2,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대체함. 물품이 단 하루만에 소진되는 사례도 있음.

□ 10. 27(월) 수협중앙회 등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	
○ 수협은행 신용대출 규모와 그 과정은? ○ 리딩에머슨3호에 펀드투자자 명단을 보면 해외법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역할은? - 이들이 190억원을 투자해서 291억원 회수(수익률 153%)했는데?	○ 도이치모터스는 100억이고 전체적인 규모는 183억으로 파악하고 있음. 도이치모터스의 경우 수협은행 독점역 지점장이 먼저 연락하여 신용대출뿐 아니라 전체 대출 관련하여 진행 ○ 부동산 투자를 하는 해외투자자로 알고 있음. - 291억원은 아니고 228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음. 당시 진행한 개발신탁은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완료가 되었고, 2호와 3호 분양이 필수였음.
<양태용 (한국김수출협회 회장)>	
○ 수협과 오리온 합작법인 추진 관련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 합작법인 관련 정치권, 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 수협이 공익적 목적보다 편익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 합작법인과 김가공 영세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10. 28(화)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임대진(광주시청 청렴기획팀장)>	
○ 광주시 농업법인 농지투기 감사 경과는? ○ 농업법인 투기 근절을 위해 필요한 대책은?	○ 농업법인 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광주시에서 지방세 감면자료, 지방소득세 신고자료, 농지직불금, 조상땅찾기 시책 등 다양한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적발 ○ 감사 결과 도심지역 개발 이익을 위한 농지 편법 취득 및 용도변경, 농촌지역 태양광 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투기 사례 등 적발했으며 법인 해산 요청, 고발 요청, 106억원 추정 등 조치함. ○ 농업법인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 필요
<문병완(농협RPC전국협의회장)>	
○ 농축협의 농지 소유를 통해 정부의 공동영농사업,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청년취업농과 노인연금제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 현장에서는 마을단위 영농형태양광사업, 임대형스마트팜 유리온실 사업 등에 관심 많으나, 취업농, 청년농은 소유농지가 없어 참여가 제한적임, 농협이 농지 취득시 농업 발전에 도움될 것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게다가 산지유통시설, 공동육묘장, 농산물창고 등 영농 관련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농협이 농지를 소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영농형 태양광 사업 시 농작물의 생산이 대폭 감소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올해 쌀 수확 전망은? ○ RPC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전략작물직불제와 관련한 정부의 수급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 동의함. ○ 실증실험을 했을 때도 80%의 수확량을 확보하였는바, 농작물 생산이 대폭 감소한다는 것은 과장된 의견임. ○ 올해 수확기 쌀값은 안정적인 것으로 예상되며, 농협RPC도 농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수확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벼를 수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요를 고려한 적정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하며, 전략작물직불제는 선제적으로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봄. ○ 정부의 지속적인 품목 확대, 단가 인상 등 정책적 지원 확대로 농가 호응이 매년 높아지고 있음. ○ 전략작물 생산기반 지원이 늘어난 만큼 유통·소비 지원사업도 확대하여 전략작물의 수급안정을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RPC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	○RPC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공용 쌀 계약재배, 쌀 수출 등의 사업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10. 30(목)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이형매 (삼천포해상풍력반대대책위 특보)>	
○ 해상풍력 발전 관련해서 국회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경남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 해상풍력 입지를 업체가 지정하는 곳에 선정하지 말고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적은 곳으로 입지를 선정하여 다른곳으로 건설해 주시기 바람.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 해수부 부산 이전에 맞춰 산업부에서 조선해양플랜트를 해수부로 이관하자는 논의를 들어본 적 있는지?	○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음.
○ 조선 기능의 해수부 이관과 관련하여 이번 정부에서 의견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 정부가 협회로 물어본 적은 없음.
○ 조선기능의 해수부 이관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 현 시점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 한국은행 이슈노트에 농수산물 가격이 ‘장기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는 왜곡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 바람.	○ 그렇게 하겠음.
<김원택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장)>	
○ 수입산 바지락의 국내 수급과 국민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염병 검역을 7~8월에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지?	○ 수입산 바지락의 품질검사 관련하여 날씨가 더워지는 7~9월에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심준오 (국가항만보안노조연맹 의장)>	
○ 현장에서 보는 항만보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 보안인력의 높은 이직률이 문제이며,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로 구분되어 있는 이원적 보안체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함.
○ 항만 보안사고 예방과 보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부족 문제를 항만시설 보안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방법은?	○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항만시설 보안료와 징수율을 높이면 국가 재정 부담 완화와 보안인력 처우 개선이 가능함.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윤성현 (前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2022년 6월 16일 해경이 수사결과 번복 발표문을 작성할 때, 초안은 인천해경서에서 작성되고, 이후 김성종 수사국장과 박홍식 형사계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검토를 받으면서 발표문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 이 사건의 번복 발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증 여부를 포함하여 고소·고발을 통한 수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참고인의 생각은? ○ 실종자에 대해서 순직 처리가 되었는데 위험 직군 순직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는지? ○ 중간수사 브리핑 과정에 청와대나 안보실로부터 월북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 그렇게 알고 있음. ○ 오늘 위원장님과 우리 상임위에 공개 수사를 요청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대질신문과 거짓말 탐지기 등을 이용해서 진실을 명백히 가려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순직 요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순직이 걱정했는지는 국민들과 국회에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청와대·안보실과의 접촉이나 외압은 없었고, 수사 결과 발표는 해양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한 내부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해경 지도부가 6월 22~23일 사이 실종자의 생존 발견 및 북한군 피격·소각 추정 사실을 인지하고도, 6월 24일 11시까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수색을 계속한 것이 사실인지? ○ 인천해경서 차원에서는 월북을 단정한 사실이 없는데, 그렇다면 해당 판단을 내린 주체가 윤성현 참고인 본인인지, SI 정보 등 일부 정황과 개인 신상을 근거로 월북 결론을 내린 판단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당시 판단이 객관적이었다고 보는지? ○ 당시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회의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검찰·감사원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함. ○ 당시 해당 사안에 관여하지 않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이후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관련 상황을 알게 되었음. ○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 월북 여부는 국방부가 보유한 SI 자료에 근거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먼저 발표하였고, 이후 해양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SI 자료의 존재를 확인한 뒤 월북 동기 파악을 위해 인천해경과 본청에서 가정사·경제적 사정 등을 검토하였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표류 예측 결과를 선택적으로 해석해 월북 판단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수사 결과 반복 발표 직전에 박상춘 인천해경서장과 통화한 적이 있는지? ○ 현재 자료에 따르면 수사국 또는 정보계장이 국정원에 확인하여 월북 정황으로 제시한 내용이 존재하는 바, 해당 판단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농해수위 차원의 검증이 필요함.	○ 표류 경로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경이 확률분포도 형태로 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설명 부족으로 국민적 오해가 발생했음. ○ 박상춘 인천해경서장과 통화하여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를 물었고, 특별한 증거는 없으나 청장의 지시로 발표를 진행한다는 답변을 들어서 당시 통화에서 발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조치가 향후 당사자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전달하였음.
<박상춘 (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022년도 6월쯤 감사원 감사받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이 사안을 다시 뒤집으라는 전화를 받거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윤성현 참고인이 일방적으로 그런 발표를 언론에 했었고, 본청으로부터 지시받은 적 없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인천해경서 수사결과 번복 발표하는 방침은 누가 정했는지?	○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해양경찰청 수사규칙에 따라 수사결과 발표 권한은 수사본부장 또는 관서장에게 있어,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인 본인이 발표하였음. 아울러 수사결과는 본청에 정식 보고계통을 통해 보고하였음.
<명성민 (해양경찰청 前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비상계엄 선포관련 법무담당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지휘부에 보고한 바가 있는지?	○ 국회에서 이미 해제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자체적인 법률 검토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고 실제로 01시경 해제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추가적인 검토는 없었음.
○ 1시에 해제가 됐는데 해경은 연락관을 파견하고 계속했는지?	○ 제가 당시에 지휘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함.

